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CONTENT

통권 19호 2010. 11

USA	통신 감시와 도청 강화 논란	5
UK	BBC 2011년 수신료 동결 결정과 논란	13
JAPAN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위한 도코모와 KDDI의 경쟁	23
CHINA	구글과 중국 정부의 분쟁	39
CANADA	CRTC의 개정 커뮤니티 TV 정책을 둘러싼 논쟁	48
GERMANY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	57
CHINA	포털 써우후와 동영상 사이트의 저작권 분쟁	64

통신 감시와 도청 강화 논란

조 대 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무선 인터넷 활성화, 그리고 시장경쟁을 통해 기존의 전화를 대체하는 혁신적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곳은 매출 감소를 걱정하는 기존 대형 통신업체들만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보장과 테러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소임과 책임이 있는 사법과 보안 당국도 새로운 통신수단의 등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첨단 서비스들이 편리하고 즉각적이며 무엇보다 감시와 도청이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자나 테러 용의자들이 악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암호화된 이메일 등은 전화 같은 기존 통신 서비스와 달리 도청이 어렵고, 관련 업체들에서 자료를 받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관계자들이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 사법 당국은 디지털 통신 전반을 감시하고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보도가 나온 뒤, 개인의 사생활(privacy) 보장 관련 단체와 업계는 뜨

미디어미래연구소 미국 통신원(카네기멜론대학교 박사과정)

거운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되거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술 진보와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규제 적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부 측과 과도한 시장 규제와 간섭이 인터넷의 본질을 훼손하고 혁신을 가로막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미 보안당국의 인터넷 감시와 도청 강화 움직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시장 반응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도청과 감시 관련 법률 제정 배경과 내용

미국에서는 이미 1994년에 제정된 '통신수단의 법 집행 협조에 관한 법(the 1994 Communications Assistance to Law Enforcement Act, 이하 CALEA)'에 따라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등의 도청이나 감시가 허용되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CALEA는 통신기술이 발전하는 데 발맞춰 기존의 구리선 기반 전화망에서부터 디지털 네트워크와 이동전화망 등 주요 통신수단 전반을 정부가 감시할 수 있는 역량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조사당국은 필요하면 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스위치 시스템(Switch System)을 통해 도청할 수 있으며, 암호화된 메시지를 도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업체에 암호를 해독한 버전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통신시스템이 구축될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업체와 장비 제조업체는 감시와 도청이 가능한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5년 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는 미 법무부와 마약 단속국(Drug Enforcement Agency)이 CALEA의 도청 범위를 인터넷전화(VoIP)까지 확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관련 사항 검토를 거쳐 CALEA 제정 이후 첫 번째 명령(Report &Order)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2007년 5월까지 인터넷 서비스와 VoIP 업체들이 도청 관련 시스템 설비를 마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FCC가 CALEA를 확대 해석하고 과도한 인터넷 규제를 시도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6년 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같이 CALEA는 이 법을 적용받는 네트워크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기술적인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과 법률적인 면에서 갈등이 상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2007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CALEA를 근거로 한 도청 건수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년 사이 62%나 증가했고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통신수단을 감시하는 사례도 그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FBI)은 2007년까지 디지털 통신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9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당국의 도청 강화 움직임

서두에 언급했듯이 통신서비스 이용 형태 변화에 따라, FBI, 법무부, 백악관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등의 사법과 보안 당국은 안보 목적의 도청과 감시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2011년 내에 관련 법안의 입법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들은 블랙베리(BlackBerry)와 같이 암호화된 이메일 통신이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SNS), 서버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P2P(Peer-to-Peer) 메시징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스카이프(Skype)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통신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신속하게 감시할 권한을 부여받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업체들은 수사나 법 집행 목적으로 당국이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실시간으로 감시받고 FBI 등이 접근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FBI의 운영기술사업부는 작년 한 해 동안 통신회사들의 도청 관련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돕는 데 975만 달러를 지출했고, 올해도 9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통신기업이 시스템에 전자 감시 기능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비교적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FBI의 법률자문위원인 발레리 카프로니(Valerie E. Caproni)는 실제로 범죄 용의자를 도청하고자 할 때, 결과를 얻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업체의 암호화 메시지는 아예 서비스 제공업체조차도 해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안보 차원에서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초 마약 카르텔 조사 당시 밀수자들이 P2P 기반 서비스로 의사소통 했기 때문에, 실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지난 5월 뉴욕 시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에서 테러를 시도하다 실패한 용의자가 기존의 도청 시스템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서비스를 활용해 테러를 도모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만약 정부당국이 사전에 이를 감지했다면, 테러 시도를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제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이 따른다.

-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이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외국 통신서비스 업체도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청이 허용되는 시스템을 미국 내에 구축해놓아야 한다.
- P2P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도청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비판적인 시장 반응과 우려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가자 시장과 업계의 우려와 비난이 쏟아졌는데, 특히 사생활 보호 단체들이나 기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정책 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제임스 뎀시(James X. Dempsey) 부회장은 "이번 제안은 분권화된 네트워크 디자인에 기반을 둔 인터넷의 본질과 근본 원리에 대한 도전이며, 향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인터넷의 핵심적인 구조 근간을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을 과거 전통적인 전화 시스템 방식으로 회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제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소속으로 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문을 담당했던 변호사 마이클 수스먼(Michael A. Sussman)에 따르면 "현재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며 수많은 회사가 보안 문제 해결에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담과 비용은 결국 통신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기술 관계자들은 도청 시스템이 해커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면도 언급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스티븐 벨로빈(Steven M. Bellovin) 교수는 그리스에서 2005년에 발생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위험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해커들이 국무총리를 포함한 고위관료들의 휴대폰으로 정보를 캐내는 데 정부의 도청 기능 시스템을 활용했었다"고 언급하며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하버드대학교 래드클리프 인스티튜트(Radcliff Institute)의 수전 란다(Susan Landau) 연구원은 이번 제안이 이행될 경우 소규모 벤처의 창업이 크게 둔화될 수도 있다는 이슈를 제기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정부가 마련한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빠른 시장 진입과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업구조를 생명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메시징 암호화 서비스 업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의 주력 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우려도 크다. 이는 과거 CALEA가 입안될 당시 있었던 관련 업체들의 반발과 유사한 것이기도 하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마크 로텐버그(Marc Rotenberg)

회장은 이미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과 국가안보영장(National Security Letters) 등의 방법을 통해 연방 관계당국이 충분히 도청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최근 수년 동안 도청 허가 영장 발급 기준도 많이 완화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생활 보호 관련 시민단체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파운데이션(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변호사 리 티엔(Lee Tien)은 이번 법안이 시민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한 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규로도 사법당국은 충분히 인터넷기업의 고객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 사생활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 권한을 왜 굳이 얻어야 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사법, 보안 당국의 주장과 일부 찬성 여론

수많은 반대 의견과 달리, FBI 같은 수사기관들은 도청을 허용하는 강제적 조항이 수사력의 한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FBI의 카프로니 자문위원은 "우리는 현재 수준의 도청 권한을 유지하려는 것이지, 이 권한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도청 권한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현재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이 권한의 보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의 우려와는 반대로 시스템 설계 초기부터 도청 기능을 설정하는 문제도 이 같은 방식이 도청 기능을 사후에 추가하는 방식보다 보안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994년 CALEA 제정 당시 많은 사람들이 CALEA가 이동통신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인터넷보안자문그룹(Internet Security Advisors Group: ISAG)'의 이라 윈클러(Ira Winkler) 위원도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우려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운을 뗀 뒤,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당연히 여기며 해오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를 거들었다. 특히 그는 사생활 보호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도청 권한에 대해 우려하기보다 실제 더욱 중요한 사안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라고 언급하며 페이스북이 해킹당하여 개인정보가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벌어지는 상황이 정부의 잠재적인 권력 남용 가능성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의 미국 대형 IT업체들은 이번 사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을 자제하고 일제히 침묵하는 양상이다. 이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안으로 정부 당국자를 자극하는 것을 꺼려 시장 여론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만이 간단한 논평을 통해 "우리는 현실화된 정책에 대해서만 논의할 뿐이며, 우리의 정책과 부합하는 한 합법적인 데이터 요구와 수사 협조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며

'만약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CALE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안과 감시 강화 기능을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기숙사 작은 방에서 페이스북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모든 P2P 통신에 가상의 도청 장벽을 설치해야 했다면 스카이프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을까?'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가 제기한 이 두 가지 질문은 사법과 보안 당국이 도청과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의 혁신과 자율적인 경쟁 침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드시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보를 위한 업무 수행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역시 법안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도청 강화 관련 움직임 보도는 아직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내놓지 않았

는데도, 미국 내 1천여 개 언론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단 이슈가 제기된 이상, 미국 정부는 향후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관련이며 기관 업체 등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USA

참고 문헌

Cato.org(2010. 1. 29). Surveillance Can't Make Us Secure.

Cnet.com(2008. 4. 23). FBI, Politicos Renew Push for ISP Data Retention Laws.

Cnet.com(2010. 2. 3). Police Want Backdoor to Web Users' Private Data.

Computerworld.com(2010. 9. 27). Privacy Advocates Criticize Government's Online Eavesdropping Proposal.

Computerworld.com(2007. 1. 23). Countdown to CALEA: Do Federal Wiretapping Laws Affect Our Network?

Federal Computer Week(2010. 9. 27). Big Brother Wants to Surf the Net with You.

New York Times(2010. 9. 28). Internet Wiretapping Proposal Met with Silence.

New York Times(2010. 9. 27). U.S. Tries to Make It Easier to Wiretap the Internet.

Vatornews.com(2010. 9. 27). U.S. Gov Seeks New Wiretapping Abilities.

BBC 2011년 수신료 동결 결정과 논란

박 성 우

UK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관리 감독 기구인 BBC 트러스트(BBC Trust)는 2011년 TV 수신료(license fee)를 지금과 같은 145.5파운드(한화 약 25만원)에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the Olympics, Media and Sport) 장관인 제레미 헌트(Jeremy Hunt)는 "만족한다(pleased)"고 밝히고 이후 2012/13년도에도 수신료가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13년도 수신료 방침은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원만히 실행되면 향후 2년간 BBC는 예산에서 약 1억 4,400만 파운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 노동당 정부 당시 확정되었던 '다년간 수신료 정책(Multi-year Licence Fee Settlements for the BBC)'에 따르면 BBC는 2011년과 2012년에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수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러한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을 내린 BBC 트러스트의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수신료 동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결정을 위해 이미 지난 6월 BBC 트러스

미디어미래연구소 영국 통신원(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 박사과정)

트는 BBC에 단기예금(Short-Term Savings)의 조달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평가와 예산 계획에 대해서 의뢰한 결과 수신료를 동결하더라도 BBC의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BBC 트러스트의 의장인 마이클 리온(Michael Lyons)은 이번 결정으로 BBC의 수입이 동결되도록 한 조치는 결코 쉬운 판단이 아니었고, 또한 그것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진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향후 BBC는 대중이 사랑하는 서비스와 방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제레미 헌트는 BBC와 BBC 트러스트가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 같은 조치는 수신료를 지불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결국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발표는 마이클 리온 BBC 트러스트 의장이 사임하고 BBC One의 책임자인 제이 헌트(Jay Hunt)가 채널4(Channel 4)로 이직하는 등 유난히 분주하고 논란이 많았던 시기에 나온 것이고, 또 BBC 내부적으로도 임직원의 기업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파업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BC 트러스트의 수신료 동결 사항에 대한 발표 내용

BBC 트러스트의 2010년 9월 16일자 발표문의 제목은 '2013년까지 2년간 수신료 동결을 제안하다(BBC Trust proposed two year freeze to licence fee to 2013)'이며 이는 9월 14일 BBC 트러스트 의장인 마이클 리온이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에게 보낸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1]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❶ 2013년 3월 말까지 현재 연간 수신료인 145.50파운드를 유지한다.

❷ 이미 계획되었던 2% 수신료 인상분과 그 이후 연도 인상분을 바탕으로 한 예산 증액분을 BBC에 지급하는 것을 보류한다.

❸ 이번 결정은 현재 영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치다.

❹ BBC 트러스트는 이미 계획되었던 다년간 수신료 정책(Multi-year Licence Fee Settlements for the BBC)과 관련한 권한과 역할을 계속 유지한다.

❺ 다년간 수신료 정책은 BBC 독립성 유지의 핵심 사항이므로 최종 결정될 때까지 중도에 발표하지 않는다.

❻ BBC가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하도록 감독하여 현재의 방송서비스가 잘 유지되도록 한다.

❼ 1억 4,4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 부족액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연 3% 효율 증진 프로그램(3% Year-on-Year Efficiency Programme)과 단기 예금액으로 충당하여 2012/13년도까지 수신료 증액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한다.

[1] BBC 웹사이트(2010) http://www.bbc.co.uk/bbctrust/assets/files/pdf/news/sml_letter_lf.pdf 참고.

〈표 1〉 수신료현황

현재 수신료	2010년 4월 1일부터 컬러 수신료 연 145.50파운드(약 25만원) 흑백 수신료 연 49파운드(약 8만원)
수신료로 운영 중인 채널 현황	BBC 1, 2, 3, 4, 뉴스, 의회, CBBC, CBeebies 5개의 네트워크 라디오,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들(라디오5, 라이브스포츠엑스트라, 라디오1엑스트라, 라디오7, 6뮤직), BBC 아시안 네트워크
기타 운영 사항	잉글랜드 내 지역 TV 방송 프로그램과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 TV, 라디오 BBC 레드버튼, BBC 모바일, BBC 웹사이트
수신료 예외	75세 이상 무료 맹인 50% 할인 라이선스 없이 시청 시 벌금 최고 1,000파운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은퇴한 계층, 60세 이상자들,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은 7.5파운드만 납부
수신 디바이스	TV, 컴퓨터, 랩톱, 이동전화 등 지상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 등 (예외) TV 방송 이후의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 시청은 라이선스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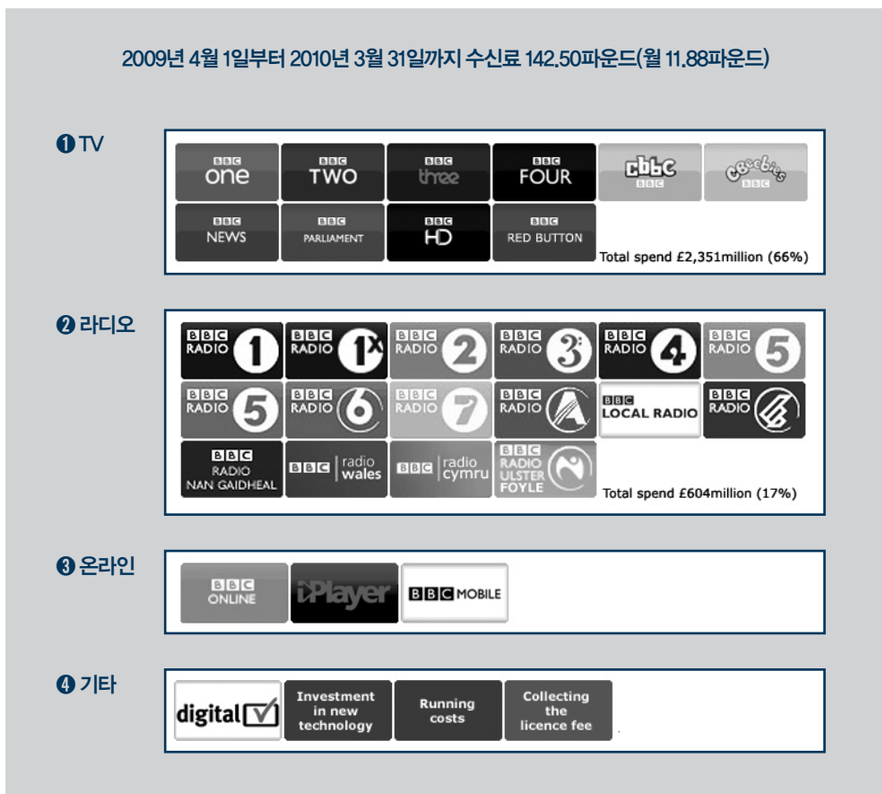
BBC와 수신료를 둘러싼 주요 논란들

정부의 강력한 공공부문 예산 긴축정책

TV 수신료 동결의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공공부문 예산 긴축정책(austerity drive)이 있는데, 그것은 BBC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두고 빈번히 제기되어온 각종 비판에 토대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BBC는 그동안 각종 언론과 국민들에게 최고경영자들과 최고 인기 출연자들에 지나치게 높은 급여와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왔다. 심지어 현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비정상적이고 터무니없는 낭비"를 저지르는 곳으로 BBC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2]. 특히 지난해인 2009년에는 총수신료 수입 53억 7,000만 파운드 가운데 약 67%에 달하는 35억 파운드를 이들에게 급여와 출연료로 지급했다. 그동안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BBC의 재정 운용상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해왔다. 영국의 대표적 언론사인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새로운 보수당 중심 연립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방만한 지출을 줄이는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수신료 동결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BBC와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BBC에서도 이미 향후 3년간 관리비 항목의 예산 가운데 25%를 삭감하고 퇴직 임원들에게 고액의 고정연금(Defined-benefit Pension Scheme)을 제공하지 않으며 BBC의 경영진 가운데 최고 연봉 수익자를 언론에 공표할 계획을 준비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자구적인 지출 규모 삭감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BBC 자체적 노력에도 결국 정부는 감사청(the National Audit Office)을 통하여 직접 BBC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수신료 동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총선 결과 야당이 된 노동당의 예비내각(Shadow Culture Cecretary) 벤 브래드쇼(Ben Bradshaw)는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과 한 인터뷰에서 "BBC와 수신료 정책은 경제적 상황과 국민의 소득 수준, BBC의 내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만 현 정부, 특히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BBC에 대한 처사를 보면 마치 반(反) BBC 전략(anti-BBC agenda)의 일환에서 정략적으로 BBC를 흔들려는 의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다"라며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은 BBC와 영국 공영방송의 전통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정신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림 1〉 2009/2010 BBC 수신료 지출 현황



출처: BBC 홈페이지 (www.bbc.co.uk/aboutthebbc/licencefee).

[2] 가디언 웹사이트(2010). http://www.guardian.co.uk/media/2010/jul/17/bbc-licence-fee-cut-hunt 참조.

2012/13 이후의 수신료와 BBC 트러스트 의장의 거취

영국 정부는 매년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게 한 이전 정부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이번 BBC 트러스트의 수신료 동결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1년만 동결하겠다는 조건을 당초 BBC 트러스트는 2013년까지 동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태도로 보아 정부는 오히려 2012년부터는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즉 정부의 계획으로는 BBC가 수신료에 의지하는 부분을 점차 줄이고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게 여러 새로운 뉴미디어 비즈니스 사업과 해외 판매 확대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을 상업방송 모델과 유사하게 수입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노동당 정부 시절 결정된 수신료 정책에 따르면 내년 2011년 4월에 2% 인상하고 그 이듬해에도 2%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의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이 정책이 전격적으로 뒤집어지고 있다. 현 연립정부에서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책의 변경과 이에 따른 여러 후폭풍 등을 의식해 '새롭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로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전 정책의 책임자였던 현 BBC 트러스트 의장의 갑작스러운 퇴임 발표와 누가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현 BBC 트러스트 의장의 퇴임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분명한 정책 변화 드라이브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BBC 트러스트의 의장 마이클 리온은 지난 9월 16일 주무 부서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인 제레미 헌트에게 보낸 문서에서 "BBC 트러스트는 여전히 강하고, 능력 있고 효율적 조직이다"라고 강조하며 동시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BBC 트러스트는 공영방송인 BBC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수신료를 지불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최근 들어 오프콤(Ofcom)과 더불어 역할 축소 등의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대표적 기구다. 마이클 리온은 BBC 트러스트의 업무들이 최근 더 많은 '요구'를 받아왔으며, 이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투자할 시간조차 없다고 말한다. 전임 의장이었던 마이클 글레이드(Michael Grade)가 ITV로 옮긴 지난 2007년 4월부터 BBC 트러스트의 수장 자리에 있는 마이클 리온은 제레미 헌트 장관에게 이 같은 자신의 퇴임 결정을 긴급히 전화로 알렸다고 전해진다. 이에 장관은 신속히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덧붙여 기존의 BBC와 BBC 트러스트의 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마이클 리온 의장의 퇴임 발표 이전에 다년간 수신료 정책 문제와 BBC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비상임 의장을 선출하자는 등 정부와 BBC 트러스트는 여러 의견을 조율하던 중이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전화로 퇴임 의사를 전한 리온 의장의 행동은 무언가 다른 여러 정황이 벌어졌고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에 충분하다. BBC 트러스트가 BBC의 관리와 감독을 맡게 된 건 2007년 1월부터였고, 이는 2004년의 허튼 보고서(Hutton Report)에서 제기된 국가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공영방송의 공정성(openness)과 투명성(transparency)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확정된 것이었다.

BBC 방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이번 결정이 방송의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로 영화와 방송을 위한 독립프로듀서연합(Producers Alliance for Cinema and Television, 이하 PACT)은 이번 수신료 동결 결정 직후 발표한 발표문에서 이런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낸다. 그들은 이번 수신료 동결 결정이 수신료를 지불하는 시청자가 기대하는 방송의 질적인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PACT의 대표인 존 맥베이(John McVay)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이러한 수신료 재원의 동결과 이후에 예상되는 축소는 BBC의 연간 3~5% 효율성 개선 목표 계획(BBC's 3~5% Year-on-Year Efficiency Target)과 맞물려 개별 프로그램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그는 또 현재 BBC의 효율성 목표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향후 5년간 거의 20억 파운드에 이르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방송의 질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라고 우려한다. BBC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독립제작사들은 이미 BBC 프로그램 예산의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상태이며, 그나마 그 프로그램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때에만 부족하나마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PACT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립제작사들이 2009년 한 해에만 BBC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2억 파운드 이상의 프로그램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프로그램 펀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제작사들에게는 이번 수신료 동결과 BBC의 긴축정책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프로그램의 질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비교적 철저한 외주제작 시스템을 운영 중인 BBC에서 정책적으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독립제작사의 문제인데 이번 수신료 정책에서도 중요한 고려 지점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지만 결국 시청자들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수준을 직접 책임지는 방송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점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영방송 BBC의 독립성 유지

결국 이러한 예산 삭감은 기존 방송 시스템의 변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데 집중된다. BBC 트러스트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고, 이를 위해 현재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BBC 트러스트 의장은 연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예외적으로 임기를 단 한 차례만 수행하고 내년에 퇴임하기로 공식 발표한 마이클 리온 의장의 경고는 몇 가지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수신료 동결에 따른 예산 삭감은 많은 고통을 동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선, BBC 트러스트는 다년간 수신료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수신료를 받는 것이 BBC의 독립성 유지와 공공을 위한 방송정책 입안의 핵심이며, 그러므로 현재 영국 국민이 처한 예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감안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신료 정책은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동시에 지금 같은 경제적 위기 때는 기존의 수신료 수입에서 더 많은 자금을 모으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개혁이나 업무 개선 작업을 충분히 벌여서 BBC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 발표한 대로 2011년 이후의 수신료 정책은 다시 다룰 예정이지만 이를 둘러싼 이견이 마이클 리온 트러스트 의장의 퇴임을 결심하게 한 원인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공영방송 BBC의 독립성 유지라는 큰 의의에 대한 뚜렷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인 제레미 헌트는 이를 의식하여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후 이 문제가 결정될 시기가 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 문제까지 연관되어 정부와 BBC, BBC 트러스트 사이에 다시 한 번 커다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트 장관은 지금까지 BBC라는 기관 자체의 문제를 많이 비판하고 있으며, BBC의 독립성이란 부분에서는 수신료 지불 고객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BBC 스스로 국민에게 직접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의 일반적인 견해로 BBC의 자체 재정 집행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를 개선해 BBC가 더욱 독립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재의 상황을 새 정부의 BBC 길들이기 혹은 BBC의 상업화를 위한 첫 조치로, 결국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는 견해 또한 팽배하고 일정 부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시사점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비 문제와 자체 제작사의 펀딩 문제의 심각성은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현상에선 별로 다르지 않지만, 방송 프로그램 편당 평균 제작비가 영국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한국 방송 현실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씁쓸한 면이 있다. 동시에 BBC 경영진의 대부분이 영국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PM David Cameron)의 연봉인 14만2,500파운드를 훨씬 웃도는 천문학적인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 또한 BBC의 독립성이란 명분과는 별도로 분명히 지적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핵심은 연간 35억 파운드에 달하는, 매일 약 1천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수신료로 거두어들이는 BBC가 재정 집행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는가? 새 정부와 언론의 힘겨루기

는 왜 정권 교체기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가? 과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앞으로도 수신료 몇 퍼센트의 인상 혹은 동결이 수준 높은 방송서비스 제공과 공영방송 독립성의 핵심이 될 것인가? 일부의 주장대로 BBC는 앞으로 수신료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형태의 스카이방송[3] 이 될 것인가? 이 와중에서 소외되는 독립제작사, 높은 수신료 자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여전히 과거지향적 수신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에 빠진 지금의 영국 현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 문헌

BBC 웹사이트(2010. 9. 15). No License Fee Increase in 2011
http://www.bbc.co.uk/news/entertainment-arts-11325325

BBC 웹사이트(2010). How the License Fee was Spent in 2009/2010
http://www.bbc.co.uk/aboutthebbc/licencefee

Guardian(2010. 7. 17). David Batty: BBC Licence Fee Could Be Cut, Government Says.

Independent(2010. 9. 16). Anthony Barnes: TV License Fee to be Frozen for Two Years.

PACT 웹사이트(2010.9.16). Pact Concerned about Further Programme Budget Cuts at the BBC.

Reuters(2010. 7. 17). Kylie MacLellan: UK Government May Cut BBC License fee in Austerity Drive.

[3] 영국의 대표적 상업방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위한 도코모와 KDDI의 경쟁

안 창 현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의 잔여 주파수를 이용한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 방송이 2012년 봄 시작될 예정이다. 그 방송설비를 운영하는 인프라 사업자 면허를 둘러싼 NTT도코모 진영과 KDDI 진영의 대립은 결국 NTT도코모 진영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지난 9월 8일 일본 총무성의 전파감리심의회는 NTT도코모 진영의 사업계획이 우위에 있다는 답신을 내놓았으며, 다음 날 NTT도코모에 면허를 교부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논쟁이 매듭지어진 것이다. 결국 기술면에서 뒤졌던 NTT도코모 진영이 방송사업자, 미디어사업자와 손을 잡고 투자비용을 억제하는 사업계획을 내놓아 역전에 성공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전파감리심의회에 선정을 일임하는 이례적인 심사과정을 거쳤다. 두 진영 간의 대립이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 민주당과 미국 정부에서 심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NTT도코모는 방송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이 설비를 이용해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시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연구원(도쿄대학교 박사과정)

장을 확대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이용하고 싶은 정보를 싸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선정된 방송 방식이 일본의 독자적인 규격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실증 실험을 거치지 않아 갈라파고스화[1] 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멀티미디어방송의 인프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 총무성의 제도 정비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 등을 정리한 뒤, 이번 정책결정에 대한 평가와 멀티미디어방송의 향후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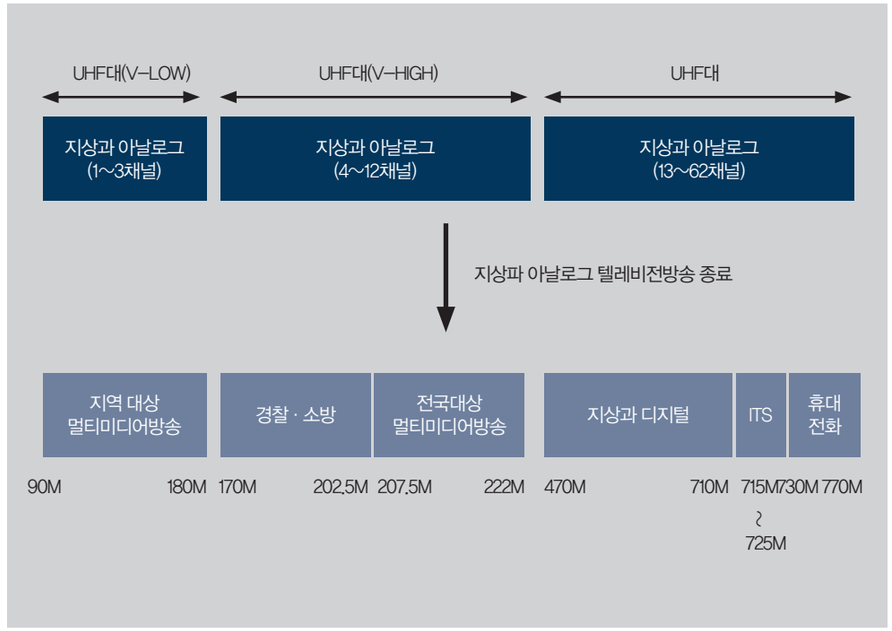
멀티미디어방송 도입 위한 제도 정비

멀티미디어방송이란?

멀티미디어방송은 2011년 7월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된 이후 잔여 주파수를 이용해 휴대 단말에 고화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등 일련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다. 일본에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은 90~108MHz, 170~222MHz, 470~770MHz의 3개 대역을 사용해왔다. 완전 디지털 전환 이후에는 90~108MHz, 170~222MHz, 710~770MHz의 대역을 지상파 디지털방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 대역 가운데 VHF-LOW로 불리는 VHF대 90~108MHz의 18MHz 대역폭, VHF-HIGH로 불리는 VHF대 207.5~222MHz의 14.5MHz 대역폭은 이동체 대상의 멀티미디어방송에 할당되었다. 특히 VHF-HIGH의 14.5MHz 폭의 대역은 전국 대상 멀티미디어방송에 할당되었다.

멀티미디어방송은 현행 원-세그먼트 방송(1 Segment Broadcasting)과 비교해 화질이 9배 가까이 향상되며, 단말에 프로그램을 축적해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그림 1〉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잔여 주파수 사용 계획



출처: 高田學也(2010). モバイル向け新放送が2011年にも. 〈日經パソコン〉(2010. 5. 24), p.12.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또 주파수 폭을 다양하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끌어들이기도 쉽다고 한다. 기존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한 통신은 한정된 데이터를 개별 단말로 송신하지만, 멀티미디어방송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송신할 수도 있다. 영화나 라이브 영상, 전자서적 등의 데이터를 아이패드(iPad)를 비롯한 태블릿(tablet)이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전자서적 단말,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단말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둔화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업계는 새로운 단말 수요를 창출하고 데이터통신의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방송은 서비스 지역을 전국 방송과 지역 블록으로 나누었으며, 방송설비

와 프로그램 제공도 분리한 이른바 하드소프트 분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전국 방송을 위한 방송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심사하는 과정이었다. 향후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NTT도코모 진영이 제공하는 방송설비를 빌려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스마트폰 등 대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단말의 등장으로 통신망을 경유하는 데이터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늘어난 데이터의 일부를 방송전파로 돌려 통신망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다양화를 실현한다는 의도다.

제도 도입 과정

멀티미디어방송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은 2007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6월 잔여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술적 조건이 정리되면서 본격화했다. 2011년 7월 24일로 예정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완전 디지털 전환 이후, 현재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에 이용되는 VHF 대역과 UHF의 일부 주파수 대역(90~108MHz, 170~222MHz, 710~770MHz)이 잔여 주파수로 남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총무성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는 2006년 3월부터 잔여 주파수대의 전파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을 논의하기 시작해, 2007년 6월 90~108MHz와 207.5~222MHz를 이동체를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방송 등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신을 내놓았다. 이러한 답신을 바탕으로 총무성에서는 휴대전화 대상 멀티미디어방송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휴대전화 대상 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등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 이하 멀티미디어방송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휴대전화 대상 멀티미디어방송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제도적 · 기술적 과제를 논의, 2008년 7월 보고서를 내놓았다.

총무성은 멀티미디어방송 간담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이동 수신용 지상파방송의 개설 계획 인정제도와 수탁방송 · 위탁방송제도[2]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및 방송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009년 4월 입법되었다[3].

이후 총무성에서는 8월 28일 제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으며, 10월 16일에는 방송 방식의 기술적 조건을 발표했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11월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모두 26개 사업자와 단체였다. 구체적으로 수탁방송 사업자는 전국 대상 방송에 3개 사, 지역 블록 방송에 3개 사가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방송 사업자로는 전국 대상 방송에 16개 사, 지역 블록 방송에 22개 사가 참여의사를 밝혔다[4].

올해 들어 총무성은 제도정비안에 대한 일반 의견을 모집했으며, 이에 대한 전파감리심의회의 자문을 요청했다. 전파감리심의회는 올해 4월 14일 총무성의 제도정비안이 적절하다는 답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4월 28일 특정 기지국의 개설 계획과 관련된 인정 신청을 5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9일 발표된 접수 결과에 따르면, NTT도코모 진영의 mmbi와 KDDI 진영의 미디어플로(Media Forward Link Only, MediaFLO) 간의 대결로 좁혀졌다. 8월 17일에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3) 사업자 선정: 도코모 대 KDDI

NTT도코모 진영의 mmbi에는 후지TV, NTV, TV아사히, TBS 등 주요 방송사업자와 이토추상사, 덴쓰, 스카파JAST등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미디어기업을 포함해 모두 10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2009년 1월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8억 4,000만 엔이다(자본준비금 6억 600만 엔).

지상파 디지털방송 기술을 응용한 규격을 채용해 새로운 송신탑을 건설 중인 도쿄스카이트리등의 방송시설을 그대로 기지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설비투자는 438억 엔으로 미디어플로 진영의 절반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NTT도코모는 2012년 봄 방송 시작에 맞춰 수신단말을 발매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유료이며, NTT도코모는 5년간 5,0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한편 KDDI는 퀄컴(Qualcomm)이 개발한 휴대전화 대상 방송규격인 미디어플로를 도입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2005년 2월 기획회사 미디어플로재팬(MediaFLO Japan)을 설립,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미디어플로재팬에는 KDDI가 80%, 퀄컴이 20%를 출자했다. 자본금은 4억 5,000만 엔이다. 실용화 실적을 가진 KDDI 진영은 휴대전화와 같이 중소형의 기지국을 다수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KDDI는 방송 시작 이후 5년간 기지국 정비 등에 961억 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투자액이 NTT도코모 진영의 배가 넘는다는 점을 총무성의 설명회 등에서 지적되었다.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변수는 설비투자액이었다. 당초 700억 엔을 예상했던 NTT도코모가 438억 엔까지 줄이는 데 성공, 역전이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두 진영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6월 25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7월 21일에는 비공개 설명회가 열렸고, 7월 27일에 다시 공개 설명회가 열리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8월 3일 민주당 정보통신의원연맹에서 실시된 설명회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총무성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강경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이 주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김과 미국 정부의 투명성 요구 등으로 총무성은 이례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전파감리심의회에 맡기게 되었다.

〈표 1〉 멀티미디어방송 둘러싼 사업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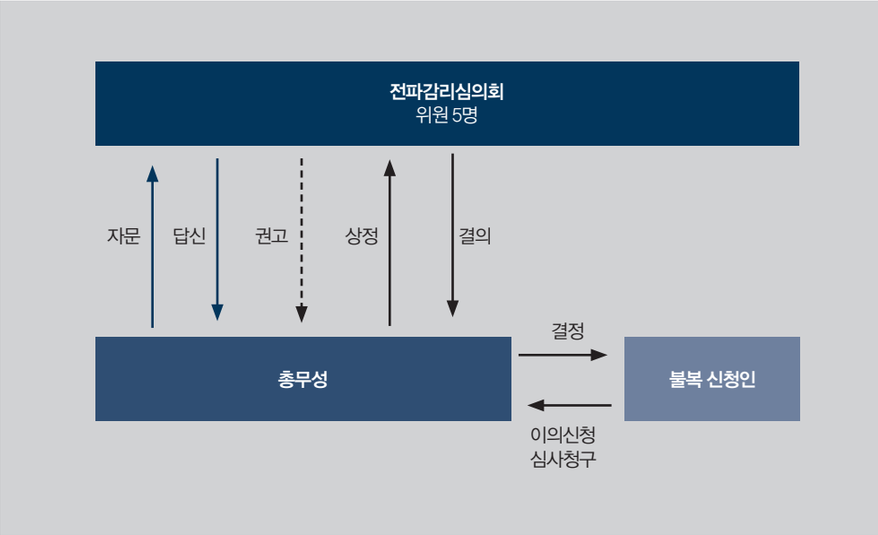
	NTT도코모 진영	KDDI 진영
사업 주체	mmbi	MediaFLO
주요 출자회사	NTT도코모, 후지TV, 이토추상사, TBS, 덴쓰, TV아사히	KDDI, Qualcomm
기술 방식	지상파방송을 응용한 일본 규격 ｉ®ISDB-Tmm ｉ®	Qualcomm이 개발한 규격 ｉ®MediaFLO ｉ®
설비투자 계획	약 440억 엔을 투자해 대형 기지국을 중심으로 125개 기지국을 설치	약 960억 엔을 투자해 중소형 기지국을 중심으로 865개 기지국 설치
특징	소프트뱅크(Softbank) 지지	미국에서 상용화. 국제표준을 지향

전파감리심의회 답신

전파감리심의회

답신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전파감리심의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전파감리심의회는 전파법 제99조의 2에 의거해 설립된 총무성의 자문기관이다. 전파법, 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지 조사, 심의, 의결한다. 또 총무대신이 자문한 사항에 충실히 답변하고 권고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이와 함께 총무대신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심사결의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전파감리심의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총무대신이 국회(참의원 · 중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러나 방송사업자나 전기통신 사업자 등의 임원은 임명할 수 없다. 임기는 3년이며, 현재 위원은 대학교수 3명, 변호사 1명, 소비생활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기지국의 허가, 휴대전화업체의 신규 참여 등과 관련해서는 전파감리심의회에서 검토한 답신 내용을 존중, 총무성의 의지를 최대한 정책 결정에 반영해왔다.

〈그림 2〉 전파감리심의회의 위상과 기능



출처: 電波監理審議會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denpa_kanri/index.html

최근 전파감리심의회는 그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복 신청을 담당하는 심리관도 거느리고 있다. 권한 강화는 2008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한편 올해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전파감리심의회가 방송의 불편부당 등을 조사,심의해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었으나, 방송사업자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총무성이 결정하기 못한 채 전파감리심의회가 판단하는 이례적인 형태로 비교심사가 이루어졌다. 총무성에서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집권 민주당 내에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분출했다. 이에 총무성에서는 2008년 전파법 개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전파감리심의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8월 17일 총무성에서 자문을 요청받은 전파감리심의회는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 지난 9월 8일 NTT도코모 진영의 mmbi가 사업자로 적당하다는 답신을 발표했다. 세 번에 걸친 공개 설명회와 비공개 설명회, 민주당 정보통신의원연맹이 개최한 설명회 등 난항을 거듭한 심사과정을 거쳐 결국 전파감리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난항 끝에 양자의 명암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

〈표 2〉 비교 심사 항목별 심의회의 평가

비교심사 항목	전파감리심의회 평가
1. 계획의 적절성 · 확실성	
1) 조기에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비계획	차이 없음
2) 수신장비를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	차이 없음
3) 위탁방송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계획	mmbi가 우위
4) 개설계획 실시에 필요한 능력 · 체제	
①기지국의 정비 능력	mmbi가 조금 우위
②수탁방송을 시작, 운영하기 위한 재무 기초	mmbi가 우위
③설비의 원활한 설치, 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	MediaFLO가 조금 우위
④보수 · 수리의 대응체제	차이 없음
⑤법령 수	차이 없음
2. 혼신 방지	
1) 혼신 · 방해를 방지하는 기술	차이 없음
2) 혼신 · 방해를 방지하는 대책	차이 없음
3. 전파의 능률적인 이용	차이 없음
4. 건전한 방송 발달에 대한 기여	차이 없음

출처: 堀越功(2010), 携帯端末向けマルチメディア放送参入の軍配はドコモ陣營に、兩者の明暗を分けたのは何か, 〈ITpro〉.

총무성은 미리 지침을 통해 하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비교심사를 위한 항목을 제시했다. 비교심사 항목으로 ❶ 방송 수신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하는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❷ 수신설비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충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❸ 위탁방송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충분한 계획 내용이 들어 있는가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항목의 핵심은 mmbi가 채용한 ISDB-Tmm이나 미디어플로재팬이 도입한 미디어플로(MediaFLO) 간에 기술

방식의 우열은 가리지 않기로 한 점이다. 즉 비교심사는 사업계획 자체의 우열을 판단하는 형태가 되었다.

전파감리심의회는 9월 8일 심의회를 마친 뒤, 비교심사 항목과 관련된 자세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비교심사의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심의회 위원이 어느 진영이 우위에 있는지 제시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두 진영의 차이를 인정한 것은 네 가지 항목이었다. 첫째 위탁방송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주로 위탁방송 사업자에 대한 요금 설정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mmbi는 미디어플로보다 기지국의 수를 대폭적으로 줄인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탁방송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 수준을 미디어플로보다 약 40~50%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분은 mmbi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파감리심의회 회장인 하라시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가 밝혔다.

둘째, 기지국의 정비 능력은 mmbi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전파감리심의회는 mmbi가 기지국의 설치 장소 확보를 위한 자세한 현지조사를 마쳤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디어플로는 증폭기 장애에 대한 대응이 뛰어나다고 인정했다. 이렇듯 두 진영이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mmbi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셋째, 수탁방송을 시작, 운영하기 위한 재무기초에서는 자금조달 능력과 흑자 전환 계획 등이 중요시되었다. 좀 더 확실한 증자 근거를 제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를 흑자 전환 시기라고 밝힌 미디어플로보다 2년 빨리 흑자로 돌아설 계획을 내세운 mmbi가 우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라시마 회장은 멀티미디어방송은 향후 유연한 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에 여유 있는 재무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려한 것은 설비를 원활하게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항목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참고로 시뮬레이션에 반영한 미디어플로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비교심사를 통해 전파감리심의회는 종합적으로 mmbi가 비교심사 기준에 더 잘 부합했다고 답신했다. 865개의 기지국을 세우겠다고 밝힌 미디어플로에 비해 이를 125개로 대폭 줄여 전국을 커버한다는 계획을 내세운 mmbi가 위탁방송 사업자의 참여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내놓아 유리한 고지를 서게 되었다.

평가와 향후 전망

사업자 선정과정

일반적으로 한 개 사업자를 선정해 면허를 교부하는 경우, 총무성은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해왔다. 즉 총무성의 결정이 타당한지 전파감리심의회에 물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정 자체를 떠넘기는 형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비교심사의 판단을 중립적인 입장인 전파감리심의회에 맡긴 이번 심사과정은 투명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총무성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는 콘텐츠 공급업자에게 받는 방송 위탁 요금을 낮출 수 있는 NTT도코모 진영의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총무성 밖에서는 KDDI 진영의 기술을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총무성은 불공정하다거나 불투명하다는 등의 비판을 피해 전파감리심의회의 자문했다. 당시 총무대신이던 하라구치 가즈히로도 8월 20일 사업자 선정을 전파감리심의회에 일임한 것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지상태로 되돌려 원점에서 논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라시마 전파감리위원회 회장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8월 3일 민주당 정보통신의원연맹이 개최한 설명회였다. 전파대역을 할당하는 데 경매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창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전파감리심의회에서 선정한 것과, 두 개 사업자를 선정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 등을 놓고 총무성 주도의 선정 방법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김이 작용, 총무성을 견제해 결국 전파감리

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된 것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총무성에서 논의할 때와 달리 자문한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답신이 나온 것은 정치 일정에 쫓긴 무리한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9월 14일 민주당 대표경선 결과에 따라서는 내각개편으로 하라구치 총무대신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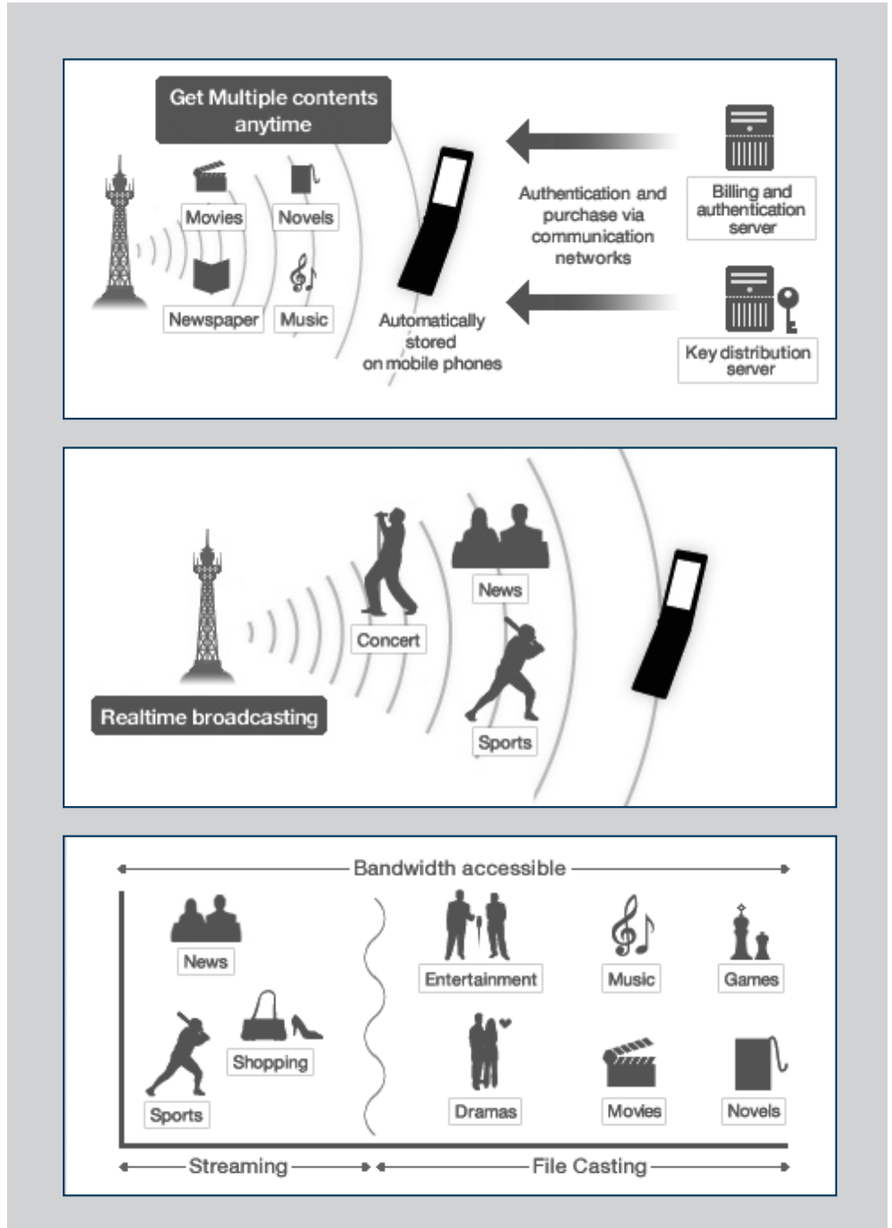
전문성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다. 전파감리심의회의 위원이 전파정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총무성에서 결정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공개 설명회에서 mmbi와 미디어플로는 상대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등 설전이 오갔다. 이러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교심사 항목 자체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2007년 차세대 통신면허 선정에서 재무평가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PHS 사업자 윌컴(Willcom)이 이후 경영난에 허덕이자, 총무성 심사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방송 전망

NTT도코모 진영이 추진하는 기지국 정비 계획에 따르면, 도쿄스카이트리와 기존 방송용 기지국을 활용해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 59%의 가구를 커버하고, 5년 뒤에 이를 92%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월이용료는 300엔 정도의 정액제이며, 특별한 콘텐츠는 별도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늘릴 생각이다. 그러나 무료 동영상서비스나 기존 다채널방송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참여가 확대될지는 향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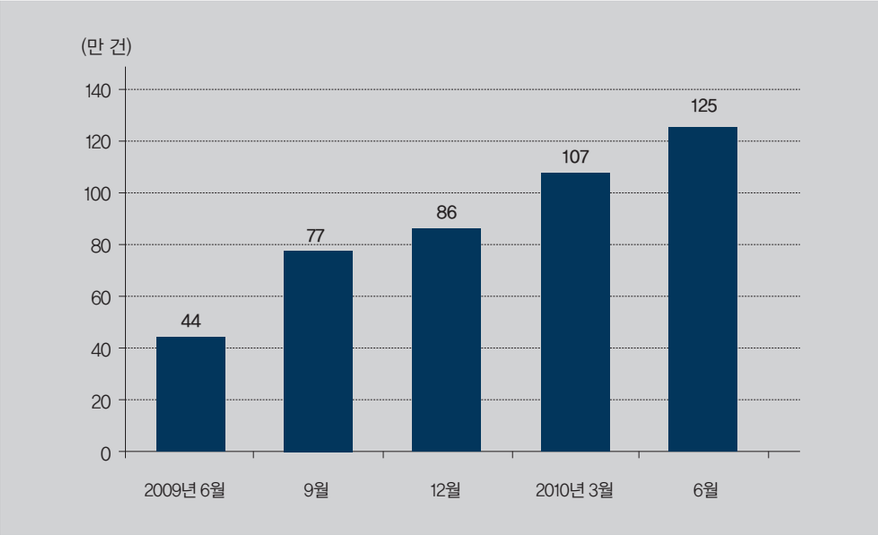
이번 선정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인프라 사업자를 결정한 것일 뿐, 실제 서비스를 추진하는 위탁방송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는 앞으로 시작해야 한다. 프로그램 공급업자는 내년 3월까지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상파방송, CATV,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도 mmbi 진영의 야마다 류지 NTT도코모

〈그림 3〉 mmbi의 다양한 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



출처: mmbi 웹사이트 http://mmbi.co.jp/en/about.html

〈그림 4〉 BeeTV의 계약 수 추이 (단위 : 만 건)



출처: NTTドコモ(2010). 2011年3月期第1四半期決算說明會資料, p.20.
http://www.nttdocomo.co.jp/corporate/ir/binary /pdf/library/presentation/100729/presentation_fy2010_1q.pdf

사장과 미디어플로 진영의 오노데라 다다시 KDDI 사장 겸 회장이 모두 쉽지 않은 사업이라며, 멀티미디어방송 자체의 사업 위험도가 높다는 공통인식을 드러냈다.

단말기 보급도 빼놓을 수 없다. NTT도코모 진영에서는 소프트뱅크(Softbank)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누계 5천~6,500만 대의 단말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서는 KDDI의 도움이 필요하다. 3,200만 가입자의 시청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KDDI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장에서는 단말기 보급에 실패해 위성 DMB 사업이 실패한 적이 있다. 2004년 도시바와 SK텔레콤이 추진한 위성방송을 통한 휴대단말을 대상으로 한 DMB 방송은 무료 원세그(One Seg)[5] 방송의 도입, 단말 보급의 지연 등으로 2009년 3월 사업을 철폐했다.

방송방식과 관련해 일본의 독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무성은 단말의 해외판매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해외에서 채용되지 않으면 세계의 기술에서 고립돼 갈라파고스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휴대전화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규격으로 선정되자 인터넷에는 갈라파고스 방송을 만들려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과제는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새로운 미디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콘텐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TT도코모는 이미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한 동영상서비스 BeeTV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전파를 활용해 휴대전화 대상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멀티미디어방송의 손익분기점은 계약자 300만 명 전후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실용화된 FLOTV는 계약자가 100만 명을 밑돌아 사업환경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멀티미디어방송은 갈라파고스화를 뛰어넘어 성공할 수 있을까.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 참고 문헌 ●

堀越功(2010). 携帯端末向けマルチメディア放送參入の軍配はドコモ陣營に、兩者の明暗を分けたのは何か. <ITpro>.

江村英哲(2010.7.26). 參入續々空き電波市場が熱い. <NIKKEI BUSINESS>.

堀越功(2010. 3. 1). 次世代ワンセグでドコモとKDDIが激突. <NIKKEI COMMUNICATIONS>.

高田學也(2010.5.24). モバイル向け新放送が2011年にも. 〈日經パソコン〉, p.12.
和氣眞也(2010.9.9). マルチメディア放送事業者: ドコモ參入決定. 〈朝日新聞〉.
總務省(2010.9.8). 電波監理審議會による207.5MHz以上222MHz以下の周波數を使用する特定基地局の開設計畫に係る比較審査の結果.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81054.pdf
總務省(2009.11.16). 携帶端末向けマルチメディア放送に係る參入希望調査の結果の公表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2ryutsu07_000020.html
總務省電波監理審議會(2010). 207.5MHz以上222MHz以下の周波數を使用する特定基地局の開設計畫の認定に係る電波監理審議會からの答申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7_01000004.html
NTTドコモ(2010). 2011年3月期第1四半期決算說明會資料
http://www.nttdocomo.co.jp/corporate/ir/binary/pdf/library/presentation/100729/presentation_fy2010_1q.pdf

JAPAN

CHINA

구글과 중국 정부의 분쟁

이 재 민

2006년 4월 인터넷 검색업체인 미국의 구글(Google)이 드디어 중국에 상륙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였다. 따라서 민주개혁이나 타이완 독립, 파룬궁(法輪功)[1]같은 용어는 구글차이나 사이트(google.cn)에서 검색 혹은 사이트 연결 기능이 차단되었다. 당시 구글 측은 비민주적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선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후 구글은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구글 검색 페이지의 말미에는 '당국의 법률 법규와 정책에 따라 일부 검색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어 구글은 5년 내에 중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서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

미디어미래연구소 중국 통신원(GN Consulting & Translation 이사)

[1] 중국의 리훙즈(李洪志)가 불교와 도교의 원리에 기공을 결합해 창시한 수련법.

를 밝혔다. 또한 소셜네트워킹과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 강점을 가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리카이푸(李开复) 구글차이나 대표는 지난 월 14일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BFA)에 참석한 직후 "우리는 향후 5년 이내 중국 시장의 리더가 될 큰 꿈을 품고 있다"고 선언했다. 당시 중국 검색시장은 중국 최대 인터넷업체 바이두닷컴(baidu.com)이 60% 이상 장악하고 있었다.

구글의 중국 철수 가능성 제기

하지만 2010년 1월 12일, 구글은 구글차이나 사이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와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킹과 검열 등이 이유였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Dabos)에서 열린 '2010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에릭 슈미트(Eric Schmidt)구글 CEO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토록 인터넷 검열이 심한 나라는 본 적이 없다"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슈미트는 당시 포럼 연설 석상에서 "중국의 현행 검열체제가 지속된다면 중국 내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초강수를 뒀다.

데이비드 드러먼드(David Drummond)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날 블로그 스폿을 통해 2009년 12월 중순 중국 해커들이 상당히 정교한 수준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목표물로 삼아 공격했다며, 이 공격으로 구글의 지적재산권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해커들이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지메일(Gmail) 계정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단 두 개의 계정만이 접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의 공격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몇 주간 중국 정부와 검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 구글 사이트를 닫고 사무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사 제품인 구글폰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전 검열에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세세하게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방화장성(防火長城)'이나 '금순공정(金盾工程)' 등 중국 정부의 시각에 비추어 '부적합'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인터넷 방화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방화벽은 좀처럼 뚫기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강화해온 중국 정부는 이를 음란 화상이 범람하고 온라인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방지하기위한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구글 검색 사이트도 2009년 1월, 4월, 6월에 국무원을 비롯해 문화부, 공안국 등 중국 정부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10대 음란 유해 정보 사이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2009년 6월 18일, '중국 온라인 위법 및 불법 정보제보 센터'는 구글의 음란, 저속 정보 전파를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구글 사이트에 있는 음란, 저속한 내용을 철저히 삭제해야 하며 관계기관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이 소식은 당시 관영 CCTV의 몇몇 프로그램에서 자세하게 방영되었다. CCTV는 예를 들어 '아들'이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아들과 어머니의 불건전한 관계' '아들과 애인'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발생' 등이 랭킹 3위 이내의 검색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블룸버그(Bloomberg) 통신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검열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충돌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나라가 정보통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으로서는 10%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은 관리들의 부정부패 척결과 환경 보호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타임〉(Time)은 거꾸로 구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서방 자본의 무경쟁 패권 체제와 실리콘밸리의 독점적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의 반발

하지만 중국 정부당국이 인터넷 해킹에 관여했다는 구글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국에 역공을 펼치면서 구글 사태는 중국 정부와 구글의 갈등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CHINA

정치적 충돌 양상까지 빚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中国信息化部)는 〈신화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구글 해킹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구글 해킹에 중국 정부가 공모했다는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업정보화부의 대변인은 "중국 법률은 어떠한 형태의 해커 공격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최대 피해자로, 필요하다면 해킹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응급중심(CNCERT) 운영부의 저우융린 부주임은 "구글의 발표와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글을 압박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중국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인을 해커로 지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융린 부주임은 나아가 "중국 내 사이버 피해의 대부분은 미국발"이라며 "중국이 미국 해커의 최대 피해국"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트로이목마' 해킹 공격의 60%는 외국에서 왔으며 그 가운데 미국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며 중국 사업 철수를 경고한 구글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의 법과 관행을 준수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문화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며 "물론 구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구글 역시 한발 물러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때 갈등 국면이 해소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었다.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와 검열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에서 철수할 가능성과 계속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모두 남아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의 반응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중국에서는 구글 사태를 둘러싸고 일부 네티즌이 구글과 중국 내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구글 사태와 관련, 중국 사회가 구글에 끌려가서는 안 되며 서방 언론이 부풀린 것처럼 중국이 분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센터 자오궈쥔 박사는 월 19일 환구시보와 한 인터뷰에서 "서방은 중국 정부와 대중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차이점을 부각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중국 사회는 결코 구글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진찬룽 중국 인민대(中国人民大)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구글 사건을 놓고 중국 내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사회가 논쟁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고 다원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방 언론이 주장하는 분열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당국자는 월 인터넷 업체 구글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구글은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검열과 해킹을 둘러싼 논쟁에 타협의 여지를 없앴다. 리이중(李毅中)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별도의 가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언급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와 관련해 "구글이 떠나든 말든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구글이 떠난다고 해도 중국의 인터넷시장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우회 철수

결국 구글은 2010년 3월 22일 중국 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어 도메인 주소(google.cn)를 홍콩 주소(google.com.hk)로 바꾸면서 우회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인터넷 검색 결과를 검열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의 CLO인 데이비드 드러먼드는 "중국 정부의 검열 요청을 중단시키면서 서면 계약을 이행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며 "우리는 되도록 많은 사람이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지만 중국 정부는 검열을 중단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은 연구개발(R&D) 센터와 광고사업 부문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구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한다"며 "구글이 중

CHINA

국 법을 지키기로 한 서면 계약을 위반하고 홍콩 사이트로 옮겨 검열을 피하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글이 이처럼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시장인 중국을 그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글로서는 지금은 중국 현지 검색업체인 바이두(Baidu)에 크게 뒤지지만 앞으로 구글폰 출시 등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2009년 바이두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63%, 구글은 33%였다.

특히 이러한 구글의 결정이 미-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시 미국과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 문제뿐 아니라 위안화 환율 문제, 이란 경제 제재 문제,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사실상 철수 결정 이전에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사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해머(Michael Hammer) 국가안전보장회(National Security Council) 대변인은 "구글과 중국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미 정부는 중국 정부와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의 반응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미-중 양국 차원의 문제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본토에서 철수하겠다는 구글의 결정은 개별 기업의 행위"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이를 중-미 관계와 중국의 이미지 훼손 등과 결부하는 것은 침소봉대이자 과민반응"이라고 말했다.한편 철수 결정 이후 중국 본토에서 구글차이나에접속해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관련 검색어를입력하면 '페이지를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메시지와 함께 웹브라우저(Web Browser)가 몇초간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구글이 중국 인터넷검색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결정하기 이전에는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당국의 검열을 마친 관련 사이트 목록이 생성됐었다. 결국 일각에서는 구글의 폐쇄 결정 발표 이후 중국 당국이 구글차이나의 검색에 대해 검열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편 구글차이나 폐쇄 결정으로 구글의 다른 중국 내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었다. 실제로 온라인 ·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인 톰온라인은 중국 법률에 저촉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구글 측과 제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기타 중국 기업들도 구글에 광고 게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3월 25일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sina.com)이 구글 검색창을 없애고 다른 파트너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대표적 인터넷 토론 커뮤니티인 톈야(tianya.cn)는 지난 월 24일 구글과 함께 해온 협력 사업을 일부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글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OS)를 이용하는 휴대폰에서는 구글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종 업체인 차이나텔레콤 역시 모토롤라 단말기에서 구글 검색엔진을 제외하기로 했다. 온라인 미디어 회사인 톰그룹(TOM集團)을 운영하는 리자청창장(長江)실업 회장은 중국 정부 당국의 규제에 따르기 위해 구글 검색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모토롤라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휴대폰 단말기에서 구글 검색 기능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화해의 움직임

그 후 언론에 중국 정부와 구글의 화해 조짐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7월 10일 중국 관련 당국은 구글의 인터넷 영업 허가(ICP)를 통과시켰다. 이는 구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이용자에게 정보 검색과 기타 서비스 제품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7월 2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관리는 구글이 중국 당국의 인터넷 영업허가를 통과했고,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주관 부처의 감독과 조사를 받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국국무원(中国国务院)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공업정보화부 통신발전사 사장 장펑은 "구글차이나는 중국에 합자회사를 등록했고, 6월 29일 공업정보화부에 연례 조사에 대한 수정 조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제출한 수정 조치에는 구글은 앞으로도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구글이 제

공하고 접수하는 정보서비스 내용에 '중화인민공화국 통신 조례' 제57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이익의 손실을 초래하고, 민족을 추동하고, 봉건적 미신을 퍼뜨리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고, 선정적인 내용 등은 검색 내용에서 제외하고, 그에 대해서는 중국 주관 부처의 감독과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구글의 합자회사 구샹(谷翔)은 이에 앞서 연례 조사를 이미 통과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구글홍콩의 검색엔진에 대해 장펑 사장은 "기업 경영자의 자유"라고 전했다. 그러나 구글차이나의 영업 허가에 '검색' 부문이 빠져 있어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구글은 사실상 중국에서의 검색서비스 제공을 포기했다. 구글차이나의 새 ICP는 음악, 인터넷 쇼핑, 번역 이 세 분야에 국한돼 있다. 구글 중화권 총감독 왕진훙은 중국 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는 세 가지 항목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웹문서, 사진과 뉴스 검색 기능은 구글홍콩 사이트(google.com.hk)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8월 10일 현재 구글차이나 사이트(google.cn)에 접속하면 화면 하단에는 'B2-20070004'라는 신규 ICP 번호가 뜬다. 사이트는 또 클릭을 통해 음악, 인터넷 쇼핑, 번역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검색어 입력부와 그 주변을 클릭하면 구글홍콩 사이트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메인 화면에는 '우리의 웹 주소(Google.com.hk)를 저장해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다. 음악, 인터넷 쇼핑, 번역이 구글의 주요 수익 창출원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이번 ICP 갱신은 중국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유지하려는 구글의 의도로 읽힌다. 구글은 ICP 갱신을 위해 지난달 말 중국 정부의 요구대로 구글홍콩 사이트 자동 연결을 중단하기도 했다.

구글이 검열 문제 등으로 중국 당국과 마찰을 빚다 어렵게 영업 허가를 다시 받았지만 마찰 과정에서 시장점유율은 20%대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 '애널리시스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올해 1분기 30.9%에서 2분기 24.2%로 낮아졌다. 반면 현지 경쟁 업체인 바이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이 기간 64%에서 70%로 높아졌고, 수입은 1년 사이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8월 초 현재 인터넷 사용자 수는 지난해 말 보다 3,600만 명이 늘어난 4억 2,0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참고 문헌

谷歌CEO: 退出中国犯了大错(2010.8.3). <大公报>

http://bj.takungpao.com/dgrw/yw/61376.html

刘欢, 王建华(2010.7.30).谷歌'被屏蔽乌龙'说明了什么 <来源新华网>

http://tech.qq.com/a/20100730/000510.htm

刘菊花(2010.7.12).谷歌通过工信部2009年度电信业务经营许可证年检<新华网>

http://www.sdgb.cn/271599.aspx

武帅(2010.8.4).谷歌问答遭封锁 中国前景依然渺茫

http://www.cb.com.cn/1634427/20100804/141761.html

谷歌谈中国屏蔽门 或是技术故障所致 (2010.7.30).<中国企业家网>

http://www.iceo.com.cn/glob/2010/0730/197486.shtml

国务院新闻办网络局负责人就谷歌搜索服务退出中国内地市场发表谈话(2010. 3. 23).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0-03/23/content_13226215.ht

<为什> 谷歌不玩了(2010.1.17).

http://hi.baidu.com/%CB%AB%D7%D3%D2%BB%BC%D2/blog/item/5869343302478ff31a4cff7c.html

Google退出中国始末(2010.1.19) http://i.eol.cn/blog_read.php?topicid=487620

CRTC의 개정 커뮤니티 TV 정책을 둘러싼 논쟁

김 상 현

지난 8월 말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 및 감독 기관인 CRTC가 새로운 커뮤니티 텔레비전 정책을 발표했으나 그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골자를 짚어보고, 그것을 둘러싼 쟁점을 소개한 뒤,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정리한다.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CRTC)는 지난 8월 26일, 캐나다 국민들에게 커뮤니티 TV 채널에 참여할 기회를 더 높여준다는 취지의 새 정책을 발표했다. 8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CRTC는 새 정책을 통해 커뮤니티 TV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이익과 현실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장에서 CRTC의 방송부문 부의장인 미셸 아핀(Michel Arpin)은 "커뮤니티 채널들은 캐나다 사람들로 하여금 TV에 비친 그들 자신과 이웃, 마을과 도시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전제한 뒤 "이는 케이블TV 회사들과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간의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방송에 접근하는 길은 되도록 열려 있어야 하고, TV 프로그램 제작에 생소한 이들에게 더욱 개방적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CRTC는 커뮤니티 채널의 프로그램 가운데 적어도 절반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해당 커뮤니티 사람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새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에게서 나와야 하고, 카메라 앞에 서든 뒤에 서든, 제작과정에도 이들이 일정 부분 관여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커뮤니티 채널의 프로그램 제작에 드는 비용의 절반 정도는 이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그리고 해당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의 훈련과 계발에 할당되어야 한다.

CRTC는 정책의 변화 폭이 큰 만큼 케이블TV 회사들이 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정책의 발효 일시를 2014년 9월 1일부터로 늦춰 잡았다. CRTC는 또 케이블TV 회사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 채널 운영에 배정하는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케이블TV 회사들은 커뮤니티 채널 운영과 관련한 회계 정보를 2012년부터 매년 CRTC에 보고해야 한다.

커뮤니티 TV란 무엇인가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서 부르는 커뮤니티 TV, 혹은 커뮤니티 채널은 각 지역의 케이블TV 회사들을 통해 서비스되며 해당 지역의 이익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이는 미국의 '대중 접근 TV(Public Access TV)'나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 및 작 콘텐트와 흡사하다.

CRTC는 현 커뮤니티 채널 정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케이블TV의 방송 수신 사업에 관한 정책(Policies Respecting Broadcasting Receiving Undertakings (Cable Television))'을 1975년에 발표했다. 당시 CRTC는 6,000가구가 넘는 가입자를 거느린 가진 케이블TV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커뮤니티의 주민들에 특화된 지역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론토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도시의 지정

미디어미래연구소 캐나다 통신원(캐나다 앨버타 주 교육부 정보 프라이버시 매니저)

된 지역마다 각기 다른 커뮤니티 채널이 제공된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225개에 이르는 커뮤니티 채널이 존재한다.

커뮤니티 채널은 지금도 케이블TV 회사들이 CRTC에서 방송 허가권을 받기 위한 의무 조항으로 돼 있다. 케이블TV 회사들은 또 가입자에게 받는 수신료 수입의 일정 부분(보통 기본 채널 수입의 5% 정도)을 커뮤니티 채널의 운영비용으로 할당해야 한다. CRTC가 작성한 '커뮤니케이션스 모니터링 리포트 2009(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 2009)'에 따르면 커뮤니티 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2008년 기준 총 1억 1,600만 캐나다달러(약 1,300억 원)였다. 이 비용은 캐나다에서 방송 허가를 받은 139개 커뮤니티 채널에 투입된 것이다. 이 중 91개는 영어 방송, 48개는 프랑스어 방송 채널이었다.

CRTC의 커뮤니티 TV 정책 개정안의 골자

CRTC는 지난 8월 26일,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CRTC의 언론 보도자료 중에서).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매주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최소한 30%는 지역 시민과 커뮤니티 그룹이 기획하거나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2014년 1월부터는 이 최소 요구 분량을 50%로 높일 것이다. 또 2014년 1월부터 CRTC는 커뮤니티 채널들로 하여금 그들 프로그램 제작 관련 지출 비용의 50%를 이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에 배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한 사업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계발하는 프로그램도 그에 해당한다."

현재 캐나다에는 커뮤니티 채널의 기획과 제작에 비용을 할당하는 케이블 시스템이 119개 있다. 지역 TV 방송국들과 달리, 커뮤니티 채널은 후원사가 어디라는 정도의 메시지만이 허용될 뿐 일반 TV로 방송되는 상업용 광고는 내보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후원사의 메시지를 통해 나오는 수입은 전액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작에 재투자해야만 한다.

캐나다산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캐나다의 대규모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영업수입의 2%까지 커뮤니티 채널에 할당할 수 있다. 이 규모는 2009년 기준 전해의 1억 1,600만 캐나다달러보다 소폭 오른 1억 1,900만 달러였다.

"과거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

그러나 CRTC의 새 정책은 정작 커뮤니티 채널과 직접 연관된 협회나 관계자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커뮤니티 텔레비전 이용자 및 방송사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Community Television Users and Stations, 이하 CACTUS)'는 "커뮤니티 채널에서 정작 캐나다의 공중(公衆)이 배제되었다는 지난 8년간의 비판과 불만이 이번 새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기존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CRTC의 새 커뮤니티 채널 정책은 구시대적 가부장제 모델"

이들이 개정안에서 특히 불만스러워하는 대목은 CRTC의 '가부장적인 커뮤니티 모델(paternalistic community model)'이 커뮤니티 채널과 그 채널 제작에 드는 비용을 모두 케이블TV 사업자의 통제권 아래 두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CACTUS의 캐서린 에드워즈(Catherine Edwards) 대변인은 "CRTC는 그간의 여러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커뮤니티 방송은 이제 전적으로 각 커뮤니티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캐나다 대중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했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니와, 캐나다의 커뮤니티 라디오 부문에서 이미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TV만 유독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커뮤니티가 자체 채널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허가권은 2002년에 도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기금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CRTC는 커뮤니티의 자체 채널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 결여를 꼽았지만, 그럼에도 '지역 프로그램 장려 기금(Local Programming Initiative Fund)'에 대한 커뮤니티의 접근을 막았고,

상업용 광고 유치도 금지했으며, 지역 특화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매년 거둬들이는 1억 2,0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기금 수혜 대상에서도 커뮤니티를 배제해왔다. 그러한 기금은 대신 케이블TV 회사들의 전문 지역 채널로 흘러들었다.

"CRTC, 캐나다의 TV 지형을 오독하고 있다"

에드워즈 CACTUS 대변인은 또 CRTC의 새 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인의 40% 정도가 케이블TV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케이블 채널을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 보는 시각은 구태의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CACTUS의 조사에 따르면 한때 300개가 넘었던 캐나다의 커뮤니티 채널과 스튜디오의 대다수가 이미 문을 닫았다"면서, "이처럼 척박한 커뮤니티 채널의 현실은 외면한 채 기존 정책을 소폭 개정하는 데 그친 CRTC의 새 정책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CACTUS가 제안하는 새 커뮤니티 방송 모델은 캐나다 전역의 모든 커뮤니티에 디지털 기술과 장비,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도 케이블TV만이 아닌 모든 플랫폼에 고루 적용하자는 것이다.

"4년의 유예기간은 너무 길다"

2002년에 나온 커뮤니티 채널 정책은 케이블TV의 커뮤니티 채널 콘텐츠 가운데 30%가 그 지역민이나 지역단체가 참여한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번 개정 정책은 이 비율을 50%로 늘렸다. CACTUS는 그러나 이 같은 증가는 실속이 별로 없다고 반박한다.

그 이유로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50%의 기준이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4년이나 더 남았다는 점이다. 새 정책이 2014년 9월 1일 이후 발효되기 때문이다. CACTUS는 그에 대해 "정책을 보통 3년마다 재심사하고 수정한다는 상식에 기댄다면 새 정책의 적용까지 무려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4년 뒤에 50% 안이 발효되고 나서도, 그때부터 정책의 통상적인 유효기간인 3년을 더하면 지금부터 7년 뒤에나 수정된 정책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고려하면 이는 실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CACTUS는 목청을 높였다.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다"

기존의 '최소 30%' 규정은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CRTC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그러한 조항을 준수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2002~2006년까지 감사를 벌였고, 실상 그 30%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자사 직원들이 제작하는 잡지형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지역 자체 프로그램(access program)'이라고 강변하며 '최소 30%' 규정에 억지로 맞추는 관행을 고집해왔다. 이것이 '최소 50%'로 증대될 경우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실적 강제 수단이 없는 마당에서 결국 의존할 수 있는 대안은 지역 주민의 감시와 압력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자체 프로그램'의 새로운 정의

새 정책은 이 같은 문제점을 적시해 '지역 자체 프로그램'의 정의를 새롭게 썼다. 그에 따르면 '지역 자체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주민이나 그룹이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내고, 그 제작과정에서 창의적인 역할—여기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on-camera) 역할도 포함된다—을 수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정의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제작되는 새로운 잡지형 포맷이 여전히 이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결론과 전망

커뮤니티 채널은 그 특성상 정부의 의도적 개입과 감시, 지원 없이는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렵다. 커뮤니티 채널을 해당 커뮤니티에 서비스하도록 요구받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제1 목적이 공익이 아닌, 사업자의 수익성 증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CRTC의 커뮤니티 채널 정책이 남다른 중요성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CRTC가 발표한 새 커뮤니티 TV 정책은 1년여 동안 각종 공청회와 여론 청취를 거쳐 나온 것이다. 그 때문에 커뮤니티 채널에 대한 해당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고, 방송분의 50%를 지역민의 참여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채우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대목이 눈에 띈다. 케이블TV 사업자들로 하여금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커뮤니티 채널 운영비로 별도 배당토록 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몇 가지 결정적인 대목에서 CRTC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지역민 참여 콘텐츠 50%' 조항과 지역민에 대한 방송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조항을 1, 2년 뒤가 아닌 무려 4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한 것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듣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 다른 여러 TV 플랫폼이 있는데도 굳이 그 대상을 유독 케이블 TV 사업자로만 한정한 점도, 최근의 복수 플랫폼 TV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사는 부분이다.

커뮤니티 TV와 채널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혹은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화려한 상업용 채널의 홍수에 가려진 탓도 있고, 무엇보다 커뮤니티 채널의 재정적 자립도가 지극히 미미한 탓도 있다. 커뮤니티 채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CACTUS가 지적했다시피 한때 300개가 넘었던 캐나다의 커뮤니티 채널은 현재 120개 정도로 현저히 위축됐다. 정부의 지역 채널 장려 기금을,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첨병인 커뮤니티 채널이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에다,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상대적 무관심, 게다가 시대에 맞지 않는 CRTC의 관련 정책의 무력증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정이, 최근 개정되어 발표된 커뮤니티 채널 정책을 통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새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기현상 때문이다. 커뮤니티 TV와 채널, 그리고 방송 관련 시민단체가 CRTC에 압력을 가해 새 정책의 발효 시기를 대폭 앞당기지 않는 한, 커뮤니티 TV의 시련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 문헌

Broadcasting Notice of Consultation CRTC 2009-661(2009, October 22). In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Retrieved October 11, 2010
http://www.crtc.gc.ca/eng/archive/2009/2009-661.htm

Community Channel (Canada)(2010, October 9). I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Retrieved October 11, 2010
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community_channel_(Canada)

Community Television in Canada(2010). In Media Toolkit for Youth Backgrounder. Retrieved October 11, 2010
http://www.media-awareness.ca/english/resources/special_initiatives/toolkit_resources/backgrounders/community_tv_canada.cfm

CRTC Changes Community Television Policy to Enhance Local Participation. (2010, August 26). In the CRTC Press Release via CNW Group. Retrieved October 9, 2010
http://www.newswire.ca/en/releases/archive/August2010/26/c5047.html

CRTC Community TV Policy Fails to Address Real Issue: CACTUS(2010, August 30). In Broadcast Magazine. Retrieved October 10, 2010
http://www.broadcastermagazine.com/issues/story.aspx?aid=1000383745

CANADA

New CRTC Community TV Policy Little Better than Previous One(2010, August 30) In the Press Release from the Canadian Association of Community Television Users and Stations (CACTUS). Retrieved October 10, 2010 from http://cactus.independentmedia.ca/node/436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

성 경 숙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스마트폰 열풍은 독일에서도 한국 못지않게 뜨거워, 요즘 대세는 단연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미디어시장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겨울 만큼 불과 1, 2년 사이에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라는 수식어는 짧지만 강렬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왔던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기 최근 들어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 해커'라는 언론의 경고가 나온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불과 두어 달 사이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볍게 넘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스마트폰, 스마트 해커

2010년은 과연 스마트폰의 해라고 할 만큼 올해 연말까지 800만 명 이상의 독일 사람들이 핸디 멀티미디어, 즉 아이폰(iPhone), 삼성 갤럭시(Samsung Galaxy) 혹은

미디어미래연구소 독일 통신원(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HTC 스마트(HTC Smart)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만 해도 약 7억 5,500만 건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다운로드되었다고 한다. 스마트폰의 편리성은 이미 무수한 광고와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담들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한 스마트폰의 이면에 대해 알려진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 독일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한 사기 사건이 수사기관과 소비자 보호원에 흔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따른 각종 피해 사례들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개인정보 보호가 유달리 철저한 독일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2010년 9월 24일에는 독일의 시사 일간지 〈자이트〉(Die Zeit)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스마트폰, 스마트 해커'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기사는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른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연구진은 30개의 서로 다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안전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구글(Google)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Android)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지금까지 약 7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미국 인텔사(Intel Co.), 듀크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시장에 소개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테인트드로이드(TaintDroid)'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재 가장 애용되는 30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안전도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총 68개의 개인정보를 발견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들 정보들은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밖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광고회사나 정보분석 서버로 전달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개인정보 전달 형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기 전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에 사전 동의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 동의 시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확인한다고 자사 대변인을 통해 단언했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 앞에서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언제 어떤 정보가 수집되어, 누구에게 전달되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를 소비자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일일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그런 수고를 하는 소비자들은 드물다.

스마트폰은 개인 컴퓨터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는 '내 손안의 컴퓨터'인 만큼 해커들에게도 흥미로운 매체일 수밖에 없다고 독일연방정보 · 통신 · 뉴미디어협회 '비트콤(BITKOM)'의 보안 전문가 누츠 노이게바우어(Nutz Neugebauer)는 강조한다.

카스퍼 스키 연구소(Kaspersky Lab)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한 트로야를 검사한 결과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특정 번호로 문자가 보내졌고 건당 6달러가 자동으로 청구되고 있었다. 독일연방주범죄위원회(Das Bundeskriminalamt, BKA)의 의장 요르크 치어케(Jörg Ziercke)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할수록 IT 정보 관련 범죄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죄들은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활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사용 요금서를 정확하게 대조해보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최근 가장 강조되고 있는 위험성은 소비자가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안전성에 있었다. 앞서 언급한 문자 사기 사건의 배후에는 불법 포르노 운영 사이트가 있었고, 자유로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장점은 보호되지 않는 무선랜(WLAN)을 통해 해커들이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GERMANY

한다. 실제로 해커들이 불법으로 알아낸 개인의 은행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은행잔고를 인출해간 사건도 발생했다.

스마트폰이 발전을 거듭하고 그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애플리케이션의 수를 고려하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심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위터(Twitter) 애플리케이션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커뮤니케이션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공식적인 페이스북(Facebook) 애플리케이션은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전송되지만 이베이(Ebay) 애플리케이션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

물론 소비자에게도 문제는 있다.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다. 그뿐 아니라 700만 명의 휴대폰 소유자들이 적어도 한 번은 자신들의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이들 중 400만 명은 독일 여론조사 기관인 포르자(Forsa)의 설문조사에서 적어도 한 번은 휴대폰을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적 정보는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될 확률이 많다. 애플사는 비용을 지불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어 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

알렌바흐 여론조사 연구소(Allensbach Institute of Opinion Research)가 2010년 9월 소비자 정보보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엄격한 독일에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는 앞서 말한 구글의 암호화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전체 인구의 75%에 이르는 독일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가 저장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제3의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불법적인 일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독일 국민 중 29%가 은행 거래 정보 유출에 따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컸고, 22%가량은 제3자에게 전달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함께 약 58%와 53%의 독일 국민은 각각 불치병과 불확실한 연금을 중요한 걱정거리로 꼽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보아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게 된 만큼, 독일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한 문항에서는 설문 참가자 가운데 약 60%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아주 걱정된다'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이들도 각각 19%로 공교롭게도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독일 국민의 30%가량이 안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 수치는 일반 기업체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도를 9%로 보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젊은 층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 중 절반가량이 정보 유출을 우려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독일 국민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무려 66%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불과 9%만이 '상관없다'고 했으며, 고작 3%만이 '인터넷상에 개인정보를 기꺼이 기입하겠다'고 응답했다. 연령층 간의 차이도 커서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 휴대폰 번호(22%)는 집 전화번호(32%)와 달리 연령층과 무관하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GERMANY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성장하나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전도에 대한 인식도 커져가고 있으며 2014년까지 4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체의 정보 암호화 또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데 AB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확산될수록 절도나 도난 시에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기업들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리서치인모션(Research in Motion, 이하 RIM)은 새로운 블랙베리 클라이언트(BlackBerry-Clients)를 개발하여 시판하기 시작했다. RIM의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기술경영자) 데이비드 야흐(David Yach)는 "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정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블랙베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어지고 있고, 향후 5년 이내 관련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폰의 성장과 더불어 업그레이드되어 시판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줄을 잇고 있다.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세계는 과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명 간과할 수 없는 위험도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이다. 물론 아직 초창기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지나친 우려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휴대폰과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를 이용한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예전에 없던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는 대비책에 대한 논의는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스마트폰이 더 스마트해질수록 이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해커들의 '새로운 세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비지-베를린 웹사이트 http://www.bz-berlin.de/ratgeber/computer/smartphones-stehlen-persoenliche-daten-article999830.html

슈피겔 웹사이트 http://www.spiegel.de/netzwelt/netzpolitik/0,1518,720333,00.html

피시벨트 웹사이트 http://www.pcwelt.de/news/Datenschutz-Smartphone-Security-steht-vor-Boom-422242.html

자이트 웹사이트 http://www.zeit.de/digital/mobil/2010-09/smartphone-app-trojaner http://www.zeit.de/digital/mobil/2010-09/smartphone-app-trojaner?page=2

분트 웹사이트 https://www.bfdi.bund.de/bfdi_forum/showthread.php?1405-Smartphones-stets-unter-Kontrolle

포털 써우후와 동영상 사이트의 저작권 분쟁

이 재 민

중국의 포털사이트 써우후닷컴(www.soho.com, 이하 써우후)과 동영상 사이트인 투더우닷컴(www.tudou.com, 이하 투더우) 사이에 벌어진 경쟁이 저작권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소송의 불씨가 된 것은 중국의 인기 드라마 〈두라라 승진기〉(杜拉拉升职记, 이하 두라라)였다.

투더우는 2010년 초에 CCTV 〈신화〉의 제작자인 상잉잉황(SEC)에서 온라인 저작권을 사들였고, 써우후는 상하이원광그룹(SMG) 산하 상하이전시전매공사에서 〈두라라〉의 저작권을 구매했었다. 구매 직후부터 써우후와 투더우 간에는 최고 인기를 누리는 이 두 드라마의 저작권 협력 모델을 구축하자는 협의가 오갔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의 결과를 낳지 못하고, 써우후가 투더우를 고소하고 투더우가 맞고소로 대응할 준비에 나서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중국 통신원(GN Consulting & Translation 이사)

사건의 발단은 투더우 쪽이 드라마 〈신화〉를 〈두라라〉와 교환 방송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불거진 써우후와 투더우 간의 저작권 분쟁은 반년이 넘도록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2010년 8월 9일 결국 써우후가 상하이 시 푸둥신구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투더우를 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분쟁의 전개과정

2009년 12월 초 투더우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들이 소유한 드라마 〈신화〉의 온라인 송출권(网络信息传播权)을 판매했다. 투더우는 수익 극대화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지명도 높은 모 종합 포털사이트가 제시한 2년간 회당 1만 위안이라는 조건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보다 낮은 가격인 2년간 회당 6,000위안의 조건으로 3대 포털사이트에 〈신화〉를 동시 판매하여 회당 1만8,000위안의 높은 이윤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동시에 쉰레이닷컴(www.xunlei.com), pps, 지둥왕(www.joy.cn), leTV, BesTV 등 여러 동영상 사이트에 송출권을 판매했다. 이후 2010년 1월 2일 〈신화〉의 온라인 방송이 시작되었다.

그 뒤 투더우는 써우후 동영상 채널인 티비소후닷컴(tv.sohu.com)에 〈두라라〉의 온라인 송출권을 구매하고 싶으며, 구체적 방식으로 교환 방송을 택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써우후 티비소후닷컴은 '이 드라마의 광고계약이 이미 마감되었고, 광고주와 한 계약에 따르면 써우후 티비소후닷컴이 반드시 3개월 독점 방송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송출권을 분할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투더우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투더우 사이트에서는 해당 드라마의 동영상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투더우는 별다른 입장 설명을 하지 않고, 대외성명을 통해 써우후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계속 번복하여 투더우 쪽에 1,000만 위안 상당의 광고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써우후도 뒤질세라 곧바로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투더우 쪽에서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써우후의 성명에 따르면, 올해 4월 투더우가 드라마 〈두라라〉를 처음 불법 방송했을 때 써우후 티비소후닷컴은 투더우 쪽에 바로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또 이 드라마의 제작사인 상하이전시전매공사도 서신 발송, 전화 통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 드라마의 온라인 방송 철회를 투더우 쪽에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투더우는 〈두라라〉의 정품 DVD 발매일인 7월 25일 여전히 이 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게다가 써우후 쪽에서 다시 통지문을 보내 즉시 삭제할 것을 투더우 쪽에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7월 26일 써우후 티비소후닷컴은 국가의 저작권보호 관련기관에 문제의 드라마를 즉시 삭제하도록 투더우와 조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투더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신화〉를 써우후 티비소후닷컴이 삭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7월 27일 써우후는 〈신화〉 방송 철회에 동의했고, 투더우도 이와 동시에 〈두라라〉를 삭제했다.

하지만 이처럼 상호 삭제한 지 10여 일이 지난 8월 9일, 써우후의 티비소후닷컴은 투더우닷컴을 상하이 시 푸둥신구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기소 내용은 투더우가 어떠한 라이선싱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써우후 티비소후닷컴이 온라인 송출권을 독점한 드라마 〈두라라〉를 수차례 방송해 써우후의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써우후 쪽은 자신들로서는 그동안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 향후 이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이 시 푸둥신구 인민법원에 투더우닷컴을 고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이미 수리되어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여 8월 16일 투더우는 써우후가 〈신화〉를 불법 방송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써우후와 투더우 양쪽의 엇갈린 주장

투더우 홍보실 관계자는 써우후 티비소후닷컴이 고소한 건에 대해 방송 전에 투더우닷컴은 써우후 티비소후닷컴과 〈신화〉와 〈두라라〉를 서로 교환 방송하기로 합의했으나 써우후 쪽의 계약위반으로 양쪽은 반년에 걸친 지리한 분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써우후의 '삭제 통보'를 받은 즉시 〈두라라〉 온라인 방송을 전부 철회했으므로 불법 방송을 했다는 써우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써우후는 예전에 일방적으로 국가 저작권 관리기관의 중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불만을 늘어놓고 있을 뿐, 여태껏 한 번도 진정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써우후 티비소후닷컴 담당자 위타오는 당초 자신들은 협상을 원했고, 이를 위해 국가판권국에 저작권 분쟁을 중재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분쟁 쌍방이 모두 국가판권국에 저작권 분쟁 중재에 나서도록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판권국을 찾아가 협상을 시도한 것은 써우후이며, 투더우는 자기방어를 위해 판권국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타오는 또 써우후가 중재를 통한 협상을 원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중 첫째는 투더우의 불법복제를 법적 절차를 밟아 소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투더우는 간단히 손해배상만 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판권국의 중재를 통해 업계의 선순환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판권국이 써우후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써우후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투더우 쪽의 주장에 대해 위타오는 "이는 투더우의 왜곡된 변론에 지나지 않는다. 판권국은 줄곧 양쪽을 중재하는 데 적극적이었고 어느 한쪽에게도 어떠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타오는 양쪽의 조율 과정에서 투더우가 〈두라라〉의 판권 구매 의향을 밝혀왔으나 제시한 가격이 턱없이 낮았고, 결국 구매하는 데 실패한 투더우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모든 동영상 사이트가 제시한 가격이 투더우닷컴이 제시한 가격의 몇 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써우후 쪽은 또 업계에서 불법복제하던 이들이 자진해서 정품화해나아가는 상황에서 투더우닷컴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써우후는 이

CHINA

사안 외에도 2010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써우후 티비소후닷컴이 온라인 송출권을 독점한 드라마 〈휴대폰〉, 〈장샤오우의 봄날〉 〈농촌 러브 스토리〉, 〈나의 청춘은 누가 주인 인가〉, 〈대진제국〉, 〈난징난징〉 등 30여 편의 인기 드라마를 투더우가 방송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사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투더우에 불법복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5일, 투더우 CEO 왕웨이는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인터넷이 탄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소송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어떤 회사도 빗겨가지 못한다. 투더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써우후가 〈두라라〉 저작권 문제로 투더우닷컴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써우후와의 법정 싸움이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 안팎의 의견

이관궈지(Analysis International)의 탕이즈 수석 애널리스트 는 "저작권은 동영상 사이트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중요한 자원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업계 내 모든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중국 내 동영상업계가 눈부신 발전을 보이면서 각 사이트 간의 자원 쟁탈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써우후 티비소후닷컴이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드라마 〈두라라〉가 7월 22일 이 사이트를 통해 방송된 이래로 회당 평균 시청 수가 1,600만 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2회에 매회 방송 전 방송되는 15~45초 광고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광고 시간이 200~600만 시간에 달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배너광고도 이에 포함된다. 어떤 웹사이트로도 이는 상당한 흡인력을 가진 콘텐츠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다 이렇게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 시장은 제작 편수는 늘어났지만 인기리에 방송되는 자원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 또한 동영상 사이트가 거금을 아끼지 않고 저작권을 구매하고 원가를 투입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이유다.

써우후가 투더우를 〈두라라〉 불법 방송 혐의로 법원에 고소한 것 외에도 투더우는 여러 회사들과 저작권 분쟁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최근 엄청난 흥행을 거둔 영화 〈대지진〉이 투더우닷컴에서 방송되고 있으나, 제작자인 화이브러더스(Huayi Bros) 쪽은 지금까지 이 영화의 온라인 방송권을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도 양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상에 나도는 관련 영화의 동영상은 모두 불법 복제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화이브러더스 쪽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법률기관이 개입하여 처리 중이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작품인 애니메이션 〈시양양과 위후이타이의 우기충천〉의 온라인 저작권 소유자인 상하이지둥온라인유한공사의 투더우닷컴 고소 건은 이미 2심 판결이 끝난 상태로 법원은 투더우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2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많은 저작권 침해 소송사건은 투더우닷컴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투더우닷컴의 창시자이자 CEO인 왕웨이는 온라인에서 저작권 관리는 소위 '안전지대 원칙(避风港原则)'이 있으므로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안전지대 원칙'이란,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ISP(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공간을 제공했을 뿐, 사이트에 게재된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다면, ISP가 권리 침해를 고지받았을 때만 삭제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며, 고지를 받지 않는다면 권리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권리 침해 콘텐츠가 ISP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어떠한 콘텐츠가 삭제되어야 하는지 고지받지 않았다면, ISP는 권리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들어 투더우 쪽에서는 저작권 소유자가 인터넷상의 전파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파업체에 삭제 통보를 하면 되고, 이 경우 ISP의 책임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안전지대 원칙은 제한조건이 있으며 동영상 사이트의 경영자로서 불법복제 행위를 숨기기 위해 안전지대 원칙을 확대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베이징 중루이 변호사사무소 리징 변호사는 "동영상 사이트는 교류의 장으로서 네티즌이 업로드한 동영상이 만약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어 제때 합당한 처리를 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 동영상이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추천해 편집, 정리, 분류 등의 과정을 통해 주동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작년부터 중국의 관련 부서는 온라인 동영상업계의 규범화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에 국가판권국, 공안부(중국의 경찰당국), 공업정보화부는 또 올해 7월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는 온라인 검열 활동을 공동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한 일련의 온라인 동영상업계 분쟁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 온라인 동영상업체가 투명성 있는 수익모델을 찾기 전까진 이러한 시장 분쟁은 아마도 정품화의 진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인사에 따르면, 국가판권국은 투더우와 써우후의 저작권 분쟁에 이미 개입하여 양쪽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과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공식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더우와 써우후는 이미 협상을 재개했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저작권 분쟁이 뚜렷한 진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써우후는 "앞서 투더우가 주동적으로 협력 의향을 밝혔고 이에 써우후는 처음부터 3개월 연장 계약을 제의했었다. 투더우 쪽이 주동적으로 이번 협력을 포기한 것이다. 투더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일재경일보는 투더우가 써우후의 '협력 파트너'에서 '광고 킬러'로 변한 것이 바로 이번 비즈니스 분쟁의 진정한 이유라고 보도했다.

시사점

최근 들어 중국의 네티즌 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는 네티즌 수 4억 2,000만 명, 모바일 인터넷 유저 수 2억 7,700 명으로 늘었다. 특히 네티즌의 동영상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이는 수익 확대를 위한 치열한 전쟁터로 변모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에 아직 업계 내 상식과 게임의 법칙이라는 것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사이트 간의 저작권 분쟁은 물론이고, 분쟁의 단계조차 진입하지 못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외국 콘텐츠 저작권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중국 내의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하겠다.

다행히 중국 정부당국이 최근 규제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 콘텐츠를 보호하겠노라 선언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 콘텐츠는 중국에서 상당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규제 등으로 방송매체에 진입하기 어려운 콘텐츠들로서는 인터넷이야말로 새롭게 중국 시청자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 할 수 있겠다.

지난 2010년 9월에는 베이징에서 한국 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의 광전총국이 지원한 한-중 인터넷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다수의 인터넷 동영상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헌한 중국 사업자들이 상을 받고, 합법화를 위한 다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가 이제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며, 이는 지금껏 기술해온 써우후과 투더우 간의 소송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한국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중국 사업자와 소통을 확대해야 할 때다.

CHINA

참고 문헌

视频版权纷争潜规则促搜狐土豆对簿公堂(2010. 8. 29). <DONEWS>

http://www.dayoo.com/roll/201008/29/10000307_103398939.htm

搜狐土豆视频版权交恶升级 双方将对簿公堂(2010. 8. 16). <比特网ChinaByte>

http://tech.sina.com.cn/i/2010-08-16/09424548905.shtml

热播剧交换引发版权摩擦 搜狐土豆互诉公堂(2010. 8. 17). <华西都市报(成都)>

http://news.163.com/10/0817/07/6E99FTR900014AED.html

消息称国家版权局要求搜狐土豆重回谈判桌(2010. 8. 12).

http://net.chinabyte.com/223/11476723.shtml

毛晶慧(2010. 8. 19). 搜狐起诉土豆网 视频纠纷升级 <中国经济时报>

http://business.sohu.com/20100819/n274328823.shtml

CHINA

과월호 색인

권호	내용	국가
[창간호] 통권1호 2008. 9	[서문]디지털 융합 시대 방송통신 부문의 분쟁과 분쟁 해결시스템	한국
	네트워크 중립성을 둘러싼 통신사업자,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이용자 간의 분쟁	미국/일본
	FCC, 컴캐스트의 P2P 제한 조치 중지 결정	미국
	일, 보상금 문제로 대립하는 디지털 저작권 문제	일본
	캐나다의 뉴스 배급사 캐네디언 프레스, 언론재벌 캔웨스트와 전쟁 중	캐나다
	구글(Google)과 비아콤(Viacom)의 충돌	미국
통권2호 2008. 10	반독점법 실시에 따른 중국 통신시장의 변화	중국
	이동전화 조기해약 위약금 분쟁 집단소송	미국
	PC수신료 판결 동향 및 전망	독일
	정보통신법 제정을 둘러싼 분쟁	일본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 분쟁	영국
	인터넷 라디오업계와 음반업계의 저작권 분쟁	미국
통권3호 2008. 11	공영방송의 온라인 사업 관련 갈등	독일
	공영방송 개혁 추진에 따른 갈등	프랑스
	ITV의 공공성 관련 분쟁	영국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일본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영국
	캐나다의 망 중립성 분쟁	캐나다
통권4호 2008. 12	온라인 비밀수색 허용 논란	독일
	인터넷 검열과 온라인 표현의 자유	미국
	중국 전신법 제정과정 분석과 향후 전망	중국
	EU 의회 및 영국 오프콤의 소비자정책 개선 동향	영국
	MVNO와 MNO 간의 접속협정에 관한 재정(裁定)	일본
	프랑스 디지털 2012 계획과 찬반 논의	프랑스
통권5호 2009. 4	주문형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논쟁	영국
	중국의 인터넷폭력 대응 논의와 전망	중국
	아이폰 이용료 분쟁을 통해 본 캐나다 무선통신 시장의 위기	캐나다
	광대역 촉진 계획과 DPI 문제를 둘러싼 논란	미국
	CMMB vs. TD, 중국 모바일TV 패권 다툼	중국
통권6호 2009. 5	공영방송 편집의 자유 논란: 편집의 자유 대 기대권	일본
	BBC의 인도적 캠페인 방송 거부 갈등	영국
	온라인상의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	미국
	유럽연합의 모바일 로밍 요금 인하 규정을 둘러싼 논란	독일
	중국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분쟁	중국
	IPTV 통합 오픈 플랫폼 캔버스 프로젝트 출시 논란	영국

권호	내용	국가
통권7호 2009. 6	FCC, 유선전화 번호이동 기간 하루로 단축	미국
	오프콤, ADR 통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처리 분쟁 중재	영국
	저작권 관리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JASRAC의 갈등	일본
	인터넷의 창작 보호와 상영 활성화에 관한 하도피법을 둘러싼 논쟁	프랑스
	버라이즌 vs. FCC, 기존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행위에 대한 논의	미국
	공중파와 케이블의 수신료 도입 논쟁	캐나다
통권8호 2009. 7	미국의 방송통신 분쟁 해결 제도 현황	미국
	CRTC와 CBSC: 캐나다 방송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두 축	캐나다
	프랑스의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을 둘러싼 갈등	프랑스
	디지털 영국을 설계하는 〈디지털 브리튼〉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불거진 갈등과 논의	영국
	위성방송사업자(BSkyB)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프리미엄(Setanta) 채널의 파산	영국
	Barnes vs. Yahoo, 판례를 통해서 본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한계 분쟁	미국
통권9호 2009. 8	프로그램 위탁거래의 현황과 관행 개선 정책	일본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비전과 FCC의 분쟁	미국
	프랑스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및 규제	프랑스
	오프콤, 유료방송시장의 부분적 규제안 발표로 스카이와 갈등 심화	영국
	FCC, 휴대폰 독점거래 조사 착수	미국
	방송통신 분쟁과 위반사항 처리기관 및 과정	중국
통권10호 2009. 9	구글보이스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과 FCC의 개입	미국
	아동보호 기술시스템 확대로 규제강화 논란 중재	영국
	정보통신법안 논쟁과 민주당 정부의 정책	일본
	청소년 인터넷 보호규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	독일
	소비자의 통신 불만 해소를 위한 중재기구 CCTS의 현황과 전망	캐나다
	인터넷 서비스 속도 논란: 차세대 망 구축비용 부담과 사용실태 공개	영국
통권11호 2009. 10	수신료를 둘러싼 NHK와 납부 거부자의 분쟁: 수신료 소송의 판결내용과 과제	일본
	BBC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확대: 사업영역 확대와 수신료 문제	영국
	페이스북 OPC의 갈등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쟁점과 전망	캐나다
	미 이동통신산업, 혁신, 경쟁, 요금 관행에 대한 논란	미국
	프랑스의 통신과 방송규제기구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	프랑스
	중국 최초의 IPTV 저장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증국
[특집호] 통권12 2009. 11	한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사례	한국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의 역할	일본
	호주의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사례	호주
	종합토론: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	종합

권호	내용	국가
통권13호 2009. 12	끊이지 않는 망중립성 논쟁: 망중립성 강화 방침과 이동통신업계의 반발	미국
	스포츠 중계권 제도 변경: 지상파방송의 공공서비스 책무와 유료방송의 차별화 전략 논란	영국
	FCC의 이동통신서비스 부문 관련 질의서와 향후 주요 분쟁 이슈 점검	미국
	TV 수신료 징수안을 둘러싼 TV 방송국 대 케이블 및 위성통신 사업자 간의 갈등	캐나다
	콘텐츠의 독점 상영권을 둘러싼 오랑주와 카날 플뤼스의 분쟁	프랑스
	중국 동영상사이트의 불법방송 분쟁과 현황	중국
통권14호 2010. 6	무선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가능한가	미국
	3G 네트워크 포화와 망 중립성 논쟁	프랑스
	FCC의 방송사 주파수 회수 추진에 따른 갈등	미국
	영상물 자료 저작권 관련 분쟁	독일
	저작권 침해 UCC 운영자에 배상 판결	일본
	오프콤, 스카이TV의 유료방송 시장독점 제재	영국
통권15호 2010. 7	미국 구글사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 분쟁	미국
	FCC의 새로운 브로드밴드 규제안 공개와 이에 따른 분쟁	미국
	프랑스텔레콤과 프리의 광케이블 설치 방식 분쟁	프랑스
	NTT 재편을 둘러싼 통신사업자의 경쟁과 갈등	일본
	공정거래청(OFT)의 IPTV 플랫폼 캔버스 승인 논란	영국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버(PIPEDA) 개정안 논란	캐나다
통권16호 2010. 8	애플(Apple), 반독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직면	미국
	NHK의 시청자에 대한 수신료 징수 소송	일본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논쟁	독일
	TV 콘텐츠의 인터넷 전송을 둘러싼 방송사와 인터넷 사업자 간 갈등	영국
	모바일 콘텐츠 다운로드 사용료 관련 분쟁	프랑스
	지역 지상파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간 재전송 대가 분쟁	캐나다
통권17호 2010. 9	오프콤 상호접속료 인하 발표에 따른 논란	영국
	NTT도코모와 생활문화센터의 MVNO 상호접속 분쟁	일본
	모비우스와 레위니옹 뉘메리크의 상호접속료 분쟁	프랑스
	컴캐스트의 NBC 합병 관련 분쟁	미국
	디지털 조세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정체성 논쟁	캐나다
통권18호 2010. 10	오프콤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완화 방침	영국
	버라이즌과 구글의 망중립성 정책 제안과 관련 쟁점	미국
	PC 이용 TV 수신에 대한 수신료 논쟁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안 C-32를 둘러싼 논쟁	캐나다
	유튜브와 GEMA의 음원 저작권 분쟁	독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분쟁	중국